
KINU 통일의식조사 2021

- Executive Summary -

2021. 7.

- 연구책임자: 이상신(통일정책연구실장/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민태은(평화연구실 연구위원)
윤광일(숙명여대 교수)
구본상(충북대 교수)

< 차례 >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코호트 분석	1
3. 조사개요	2
4. 조사 결과 요약	3
II. 통일인식과 북한인식	5
1. 통일필요성	5
2. 통일 vs 평화공존	6
3. 민족주의 통일	8
4. 통일의 정의	9
5. 통일의 이익	11
6. 남북관계 5년 전망	12
7. 북한에 대한 관심 혹은 무관심	13
8. 북한의 국가 이미지	15
9.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	17
10. 북한의 의도	18
11. 북핵 인식	19
12. 북한 코로나19 지원	21
III.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23
1. 남북한 합의 계승	23
2. 대북지원 계속	24
3. 남북관계 개선 vs 한미동맹 강화	26
4. 한미동맹 필요성	28
5. 주한 미군 주둔 필요성	29
6. 미국의 대북제재 평가	31
7. 종전선언	33
8. 한미관계 평가	35
9. 방위비 분담금 평가	36

10. 바이든 북미정상회담 전망	38
11. 미국인식: 쿼드참여	41
IV. 북한관련 가짜뉴스의 확산	43
1. 가짜뉴스 식별도	43
2. 주요 집단별 가짜뉴스 식별도	45
V. 공정성 인식과 통일·대북 정책태도 및 주변국 인식	51
1. 공정성 인식유형 분류: 임금(연봉) 차이에 관한 두 문항	51
2. 공정과 통일인식: 평화공존 지향 vs. 통일 지향	53
3. 공정과 통일인식: 연합통일	54
4. 공정과 북한인식: 김정은 신뢰도	55
5. 공정과 대북정책: 무력충돌 불사	56
6. 공정과 대북정책: 금강산 관광 재개	58
7. 공정과 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60
8. 공정과 대북정책: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의료용품 지원	62
9. 공정과 주변국 인식: 남북한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국가	64
10. 주변국 인식: 주변국 호감도	66
11. 주변국 인식: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67
12. 요약 및 결론	68

< 표 차례 >

<표 1> 한미동맹 필요성: 지지정당(%)	28
<표 2> 통일 후 주한미군 필요성(%)	29
<표 3> 바이든 정부 경제제재 전망: 지지 정당-완화해야 한다(%)	32
<표 4> 종전선언: 지지정당(%)	33
<표 5> 종전선언: 코호트(%)	34
<표 6> 한미관계가 나빠진 이유(%)	35
<표 7> 방위비 분담금 평가: 지지정당(%)	36
<표 8> 방위비 분담금 평가: 코호트(%)	37
<표 9> 쿼드 참여: 지지정당(%)	41

<표 10> 공정성 인식유형 분류	51
<표 11> 공정성 인식유형별 비율	52
<표 12> 공정성 인식유형과 통일인식	53

< 그림 차례 >

<그림 1> 통일필요성 2007-2021	5
<그림 2> 통일선호 vs 평화공존선호 2016~2021	6
<그림 3> 통일선호 vs 평화공존선호 코호트별 비교 (2020~2021)	7
<그림 4> 민족주의 통일관 2017~2021	8
<그림 5> 단일제 vs 연합제 선호 2020~2021	9
<그림 6> 단일제와 연합제 선호 코호트별 비교: 2020~21년 횡단면 분석	10
<그림 7> 국가 및 개인 통일편익 변화 추이 2014~2021	11
<그림 8> 남북관계 5년 전망 2018~2021	12
<그림 9> 북한에 대한 무관심 2015~2021	13
<그림 10> 북한에 대한 무관심: 코호트별 비교 2015~2021	14
<그림 11> 북한 이미지 변화추이 2014~2021	15
<그림 12> 지지정당별 북한 이미지 비교 (2021)	16
<그림 13> 김정은 신뢰 / 대화와 타협 추구 2016~2021	17
<그림 14> 북한의 의도 2019~2021	18
<그림 15> 북핵 인식의 변화 2016~2021	19
<그림 16> 북한 코로나19 지원에 대한 의견 2020~2021	21
<그림 17> 북한 코로나19 적극지원 정당별 비교 2020~2021	22
<그림 18> 남북한 합의 계승	23
<그림 19> 대북지원 계속	24
<그림 20> 대북지원 계속: 지지정당	25
<그림 21> 남북관계 개선 vs 한미동맹 강화	26
<그림 22> 남북관계 개선 vs 한미동맹 강화: 코호트	27
<그림 23> 한미동맹 필요성	28
<그림 24> 주한 미군 필요성	29
<그림 25> 통일 이후 주한 미군주둔: 세대별	30
<그림 26> 미국의 대북제재 평가	31
<그림 27> 바이든 정부 대북제재 전망	32

<그림 28> 종전선언	33
<그림 29> 한미관계 평가	35
<그림 30> 방위비 분담금 평가	36
<그림 31> 북미정상회담 전망	38
<그림 32> 북미정상회담 전망: 지지정당	39
<그림 33> 북미정상회담 전망: 코호트	40
<그림 34> 퀴드 참여	41
<그림 35> 가짜뉴스 식별도	43
<그림 36> 가짜뉴스 식별도: 2점 리코딩	44
<그림 37> 연령대별 북한관련 가짜뉴스 식별도	45
<그림 38> 성별 북한관련 가짜뉴스 식별도	46
<그림 39> 교육수준별 북한관련 가짜뉴스 식별도	46
<그림 40> 가구 월평균소득별 북한관련 가짜뉴스 식별도	47
<그림 41> 주관적 소득수준별 북한관련 가짜뉴스 식별도	47
<그림 42> 영호남 거주지별 북한관련 가짜뉴스 식별도	48
<그림 43> 정치이념별 북한관련 가짜뉴스 식별도	49
<그림 44> 정당지지별 북한관련 가짜뉴스 식별도	50
<그림 45> 세대별 공정성 인식유형	52
<그림 46> 공정성 인식유형별 연합통일 동의	54
<그림 47> 공정성 인식유형별 김정은 정권 신뢰도	55
<그림 48> 공정성 인식유형별 북한과 무력충돌 불사	56
<그림 49> 공정성 인식유형별 무력충돌 회귀분석	57
<그림 50> 공정성 인식유형별 금강산 관광 재개	58
<그림 51> 공정성 인식유형별 금강산 관광재개 회귀분석	59
<그림 52> 공정성 인식유형별 탈북자 지원강화	60
<그림 53> 공정성 인식유형별 탈북자 지원강화 회귀분석	61
<그림 54> 공정성 인식 유형별 코로나19 북한의료 지원	62
<그림 55> 공정성 인식유형별 코로나19 북한의료 지원 회귀분석	63
<그림 56> 남북한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주변국	64
<그림 57> 공정성 인식유형별 통일을 가장 반대할 국가	65
<그림 58> 주변국 호감도 추이	66
<그림 59>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67

I. 서론

1. 연구목적

- KINU 통일의식조사는 대면조사(face-to-face survey)를 통해,
- (1) 국민들의 통일, 북한, 통일·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 남북통합과 안보관,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를 연구하고,
 - (2) 이러한 인식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며,
 - (3)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통일·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코호트 분석

- KINU 통일의식조사의 코호트
- 기존의 여론조사에서는 조사시점에서의 응답자들의 현재적 연령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함. 예를 들어 “20대”, “30대” 등임.
 - 그러나 이런 방식은 KINU 통일의식조사 같은 연례조사에서는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음.
 - 따라서,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탄생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코호트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음. 코호트 분류는 기존연구들을 문헌조사하여 결정하였음.

<표 I-1> KINU 통일의식조사의 한국 사회 코호트 분류

코호트	탄생년도	2021년 조사 빈도	%
전쟁세대	1950년 이전 출생	102	10.2
산업화세대	1951년-1960년	167	16.7
386세대	1961년-1970년	194	19.3
X세대	1971년-1980년	194	19.3
IMF세대	1981년-1990년	161	16.1
밀레니얼세대	1991년 이후 출생	185	18.4
합계		1,003	100.0

3.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2021년 3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표집
표집방법	2021년 3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본단위	총 1,003명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대면면접조사 (PI : Personal Interview)
조사기간	2021년 4월 26일 ~ 5월 18일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4. 조사 결과 요약

□ 통일과 북한인식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당폭 상승함. 2020년 52.7%에서 6.0%p 상승하여 올해 조사에서는 58.7%를 기록함.
- 남북관계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평화공존”과 “통일”로 양극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평화공존 선호 56.5%)
-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그것도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에 찬성의견 63.2%임.
- 향후 5년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조사 이후 처음으로 5년 후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응답(20.3%)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13.0%)을 앞섬. 대다수의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나빠지거나 좋아지기보다 현 상황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함(66.7%).
 -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관심하고 기대 자체를 접는 경향이 커진 것으로 보임.
- IMF세대와 밀레니얼세대는 그 윗세대와 비교하여 뚜렷하게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높음. (IMF세대 68.3%, 밀레니얼세대 74.1%)

□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라는 진술에 67.7%의 응답자가 동의함.
 -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한반도 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데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 될 수 있음을 시사
- 귀하는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93.8%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앞선 3번의 조사에서도 응답자 90% 이상이 미래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귀하께서는 주한미군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90.3%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그러나 같은 질문을 “통일 후”로 시점을 달리해 조사한 결과 주한 미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47.9%)
- “지난 1년 동안 한미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지난 해 11월 조사보다 16%p 많은 70.3%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함.
 - 반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12%p 줄어든 25.9%로 조사됨.
- “최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증액하기로 한 분

담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4.5%의 응답자가 ‘많이 낸다’고 답함.

- 지지 정당에 관계없이 분담금 인식에 대한 평가 양상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됨.
- “귀하께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69%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북한관련 가짜뉴스 인식

- 30대 이하가 40대 이상보다 북한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한 것으로 보임.
- 소득, 거주지역, 이념, 지지정당에 따라 가짜뉴스를 믿을 가능성에 차이가 발견됨.

□ 공정성 인식과 통일인식

- 공정성 인식 유형 가운데 노력(능력)과 대가의 비례성을 강조하는 능력주의형이 가장 덜 통일지향적인 것이 확인됨. 그러나 능력주의형이 통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능력주의형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보다 뚜렷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상대적으로 보편 평등형은 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임. 금강산 관광으로 발생하는 부담의 1차적 책임은 관광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비례성을 강조하는 능력주의형은 굳이 관광 재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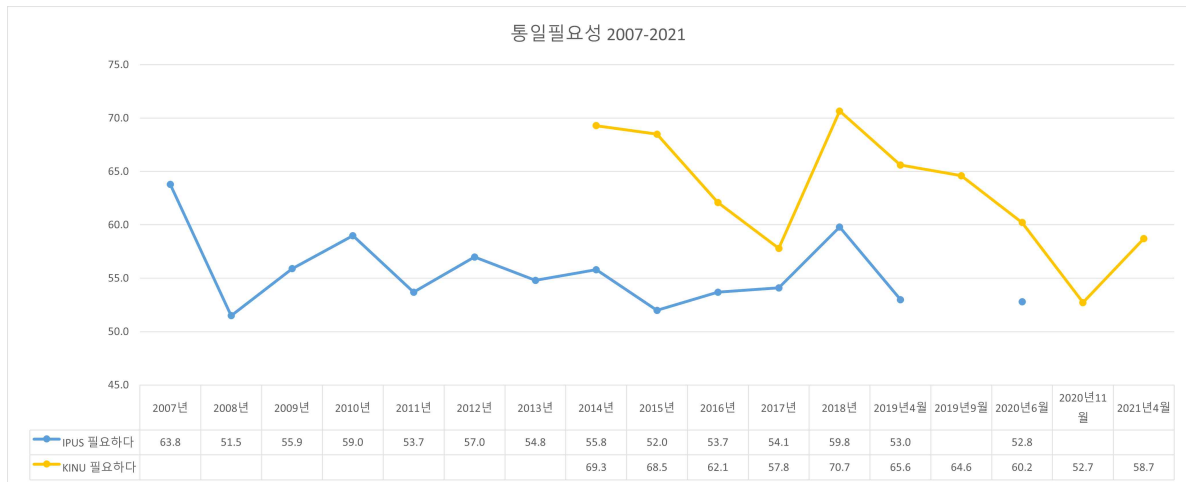
□ 주변국 호감도

- 2021년에는 모든 주변국 호감도가 하락함. 특히,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반일정서가 극에 달했던 2019년보다 더 낮게 나타남. 이는 스가 총리가 들어서면서 한일관계의 개선 등을 기대했으나 아베 총리 시절과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도 크게 증가함. 성별, 연령, 지역, 이념,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등을 통제한 회귀모형 결과에 고려하면, 젊은 층(특히 밀레니얼세대)의 반중 정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호감도는 2021년 조사에서는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20점 이상 앞섬. 이 조사가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인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일본의 스가 총리의 경우 아직 아베 전 총리 수준으로 호감도가 낮아지지 않는 반면, 2020년 1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주변국 지도자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호감도 감소이며, 이는 현재 난관에 봉착한 한일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II. 통일인식과 북한인식

1. 통일필요성

<그림 1> 통일필요성 2007-2021



□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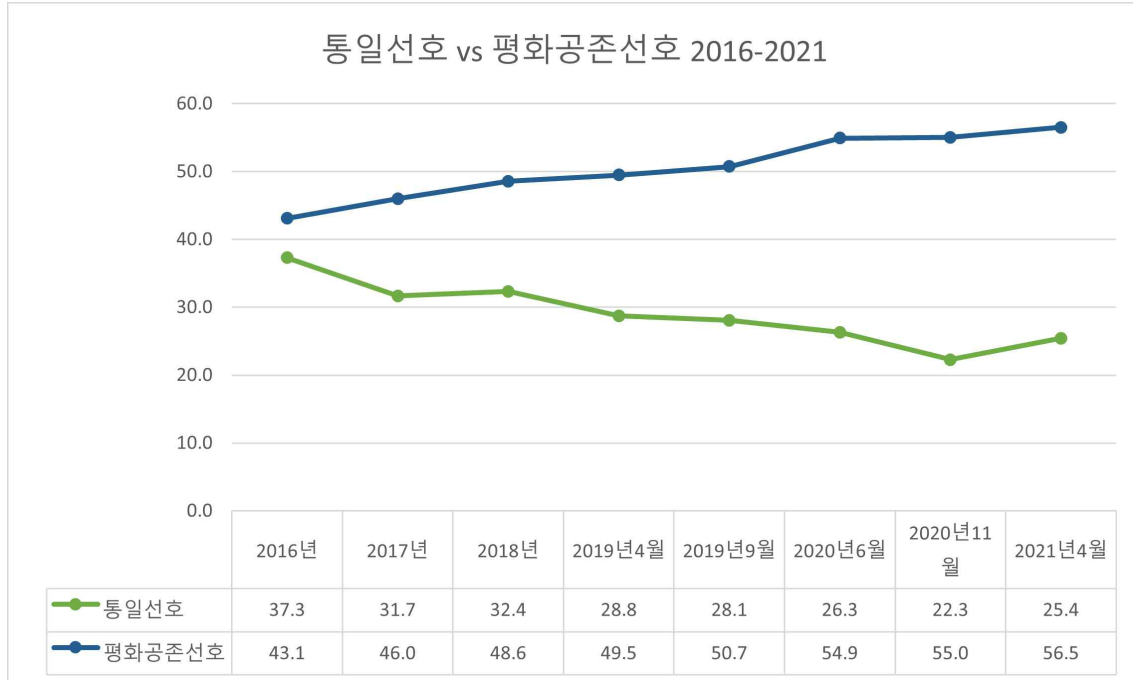
- 통일연구원(KINU): 4점 척도 측정(1=전혀 불필요, 2=별로 불필요, 3=약간 필요, 4=매우 필요)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IPUS): 5점 척도 측정(1=전혀 불필요, 2=별로 불필요, 3=반반, 4=약간 필요, 5=매우 필요)

□ 2021년 변화 추이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당폭 상승함. 2020년 52.7%에서 6.0%p 상승하여 올해 조사에서는 58.7%를 기록함.
- 통일필요성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 2018년 하노이 북미정상 회담의 실패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 이후 남북대화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됨.

2. 통일 vs 평화공존

<그림 2> 통일선호 vs 평화공존선호 2016~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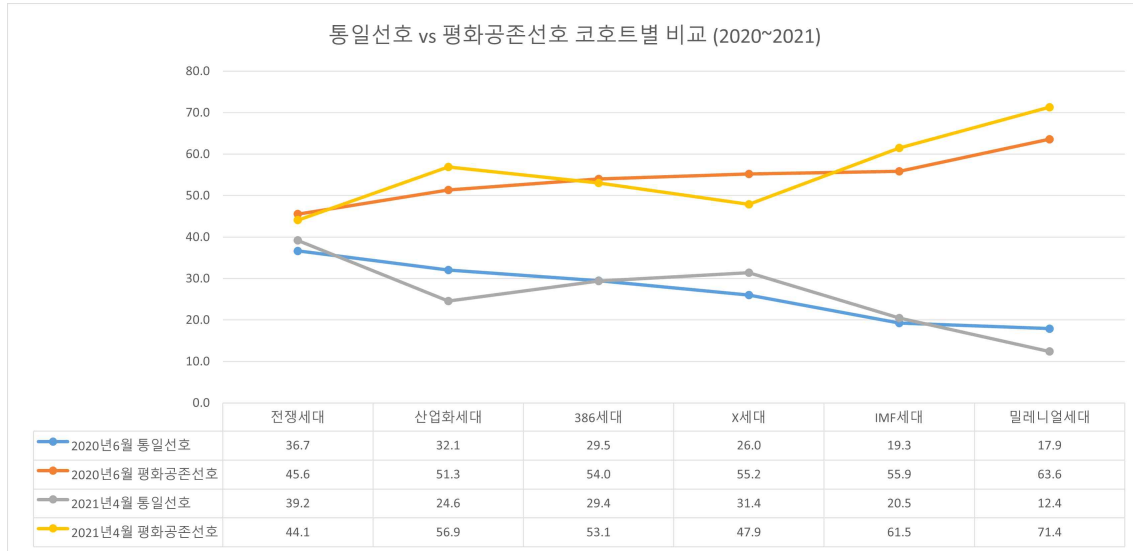
☐ “남북한이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

- 5점 척도로 측정(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 4=다소 동의; 5=매우 동의)
- 이 문항에 대한 긍정응답(다소 동의함, 매우 동의함)을 “평화공존선호”, 부정응답(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통일선호”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 2021년 추세와 변화

- 이 문항의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계속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음. 2020년 6월 조사에서 평화공존선호가 55.0%였던 것이 2021년 4월 조사에서는 56.5%로 증가되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 반면 통일선호 비율도 마찬가지로 약간 증가함(22.3% → 25.4%).
- 두 의견 사이의 중간점인 “보통”을 선호하는 비율이 조사 이후 최저인 18.1%를 기록함.
- 이러한 변화는 결국 남북관계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평화공존”과 “통일”로 양극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3> 통일선호 vs 평화공존선호 코호트별 비교 (202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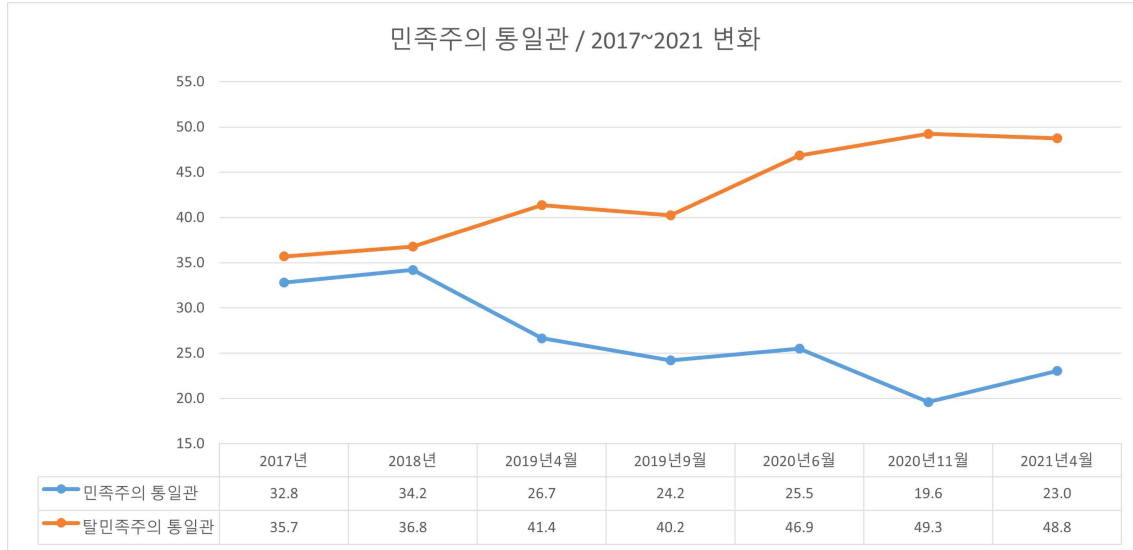


□ 평화공존선호의 코호트별 비교

- 밀레니얼세대, IMF세대, 산업화세대에서 지난 1년 사이에 평화공존선호 증가
 - 밀레니얼세대: 63.6% → 71.4%
 - IMF세대: 55.9% → 61.5%
 - 산업화세대: 51.3% → 56.9%
- 밀레니얼세대와 산업화세대에서 통일선호가 감소
 - 밀레니얼세대: 17.9% → 12.4%
 - 산업화세대: 32.1% → 24.6%
- 밀레니얼세대는 통일선호와 평화공존선호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큼. 2021년 조사에서는 평화공존선호 71.4%, 통일선호 12.4%로, 무려 59%p의 차이를 보임.
-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추세는 따라서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3. 민족주의 통일

<그림 4> 민족주의 통일관 2017~2021



☐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 5점 척도로 측정(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 4=다소 동의; 5=매우 동의)
- 위 문장에 대한 부정응답을 “민족주의 통일관”, 긍정응답을 “탈민족주의 통일관”이라고 코딩하여 위의 그래프를 작성함.

☐ 민족주의 통일관의 소폭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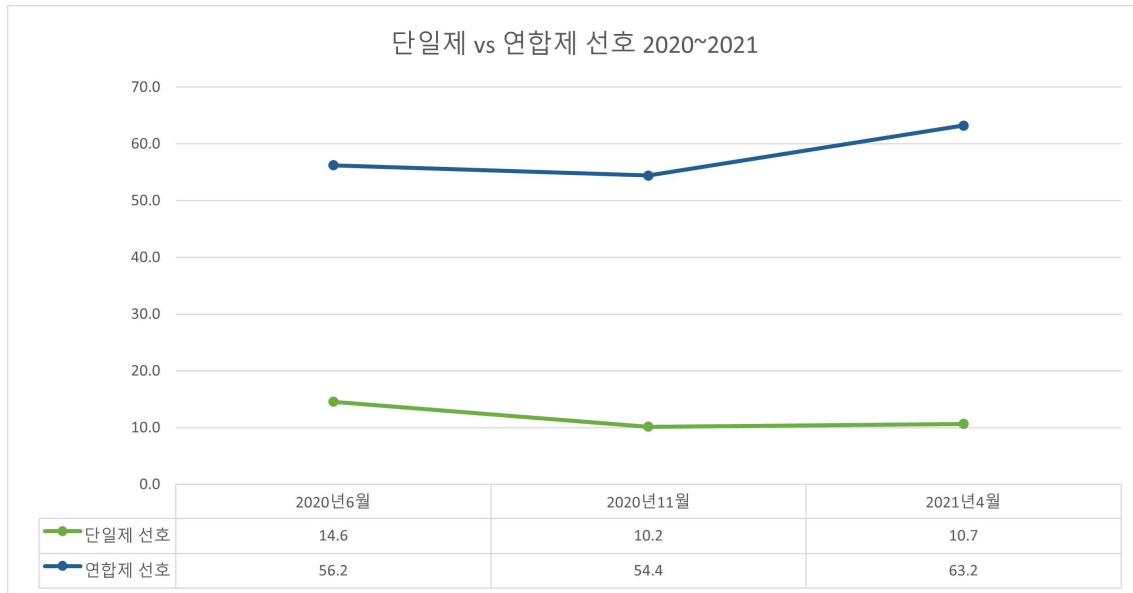
- 2017년 측정이 시작된 이후,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국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탈민족주의적 시각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 탈민족주의적 통일관은 2020년 11월 조사에서 49.3%를 기록한 후, 이번 조사에서는 48.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 반면 민족주의적 통일관은 2020년 11월 조사에서 이 문항 조사 이후 최저였던 19.6% 였으나, 여기서 약간 반등하여 23.0% 상승

☐ 통일관의 변화 양상 뚜렷

-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민족이 통일의 충분조건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이 문항은 2017년 측정 시작되어서, 남북 간의 관계가 다시 호전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었을 때의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 추적 조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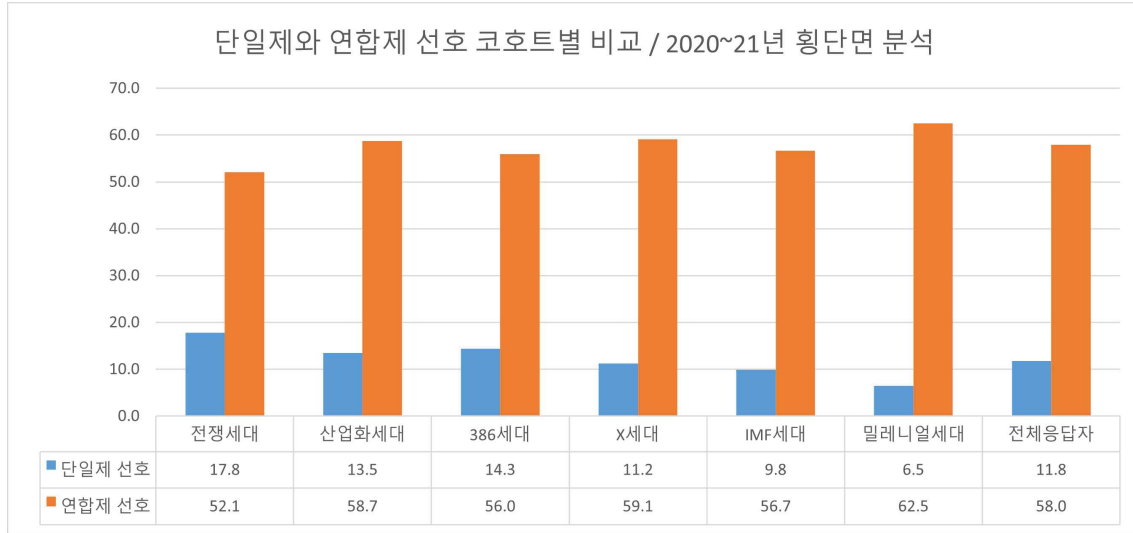
4. 통일의 정의

<그림 5> 단일제 vs 연합제 선호 2020~2021



- ☐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그것도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 5점 척도로 측정(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 4=다소 동의; 5=매우 동의)
 - 부정응답을 “단일제 선호”, 긍정응답을 “연합제 선호”로 해석하여 코딩
- ☐ 연합제 선호의 증가
 - 이 문항은 유럽연합 모델을 전통적인 단일제 국가 통일관과 비교하기 위하여 설계됨.
 - 단일한 국가, 정부로 묶이지 않더라도, 남북 사이의 교류와 정치·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통일로 볼 수 있다는 유연한 통일관이 63.2%에 달하고 있음.
 - 2020년 11월 조사(54.4%)와 비교하면 8.8%p 증가함.

<그림 6> 단일제와 연합제 선호 코호트별 비교: 2020~21년 횡단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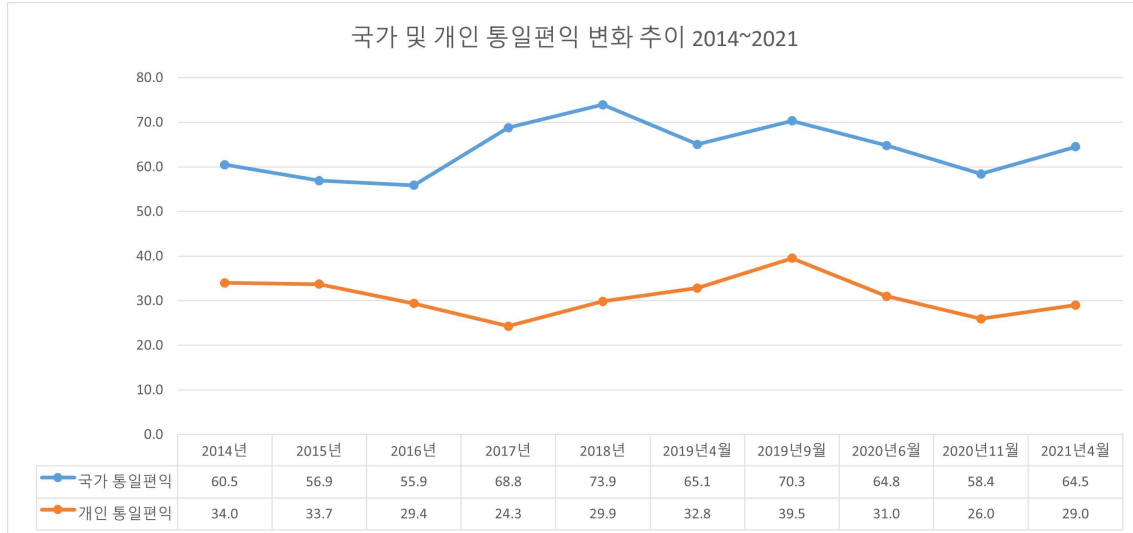


□ 코호트별 비교

- 2020년 6월, 2020년 11월, 2021년 4월 조사 데이터의 횡단면 분석 (cross-sectional analysis)으로 코호트별 선호를 비교함.
- 전통적인 통일관이라 할 수 있는 단일제 통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전쟁세대 (17.8%)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전쟁세대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52.1%가 연합제 선호함.
- 젊은 세대일수록 연합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됨. 특히 가장 연합제에 적극적이면서 단일제 선호 비율이 낮은 것은 밀레니얼세대임. 단일제 선호가 6.5%에 그쳤음.
- 이러한 세대별 차이는 외국 여행 경험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유럽연합 등의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과 관계있을 것으로 추정됨.

5. 통일의 이익

<그림 7> 국가 및 개인 통일편익 변화 추이 2014~2021



□ 국가와 개인의 통일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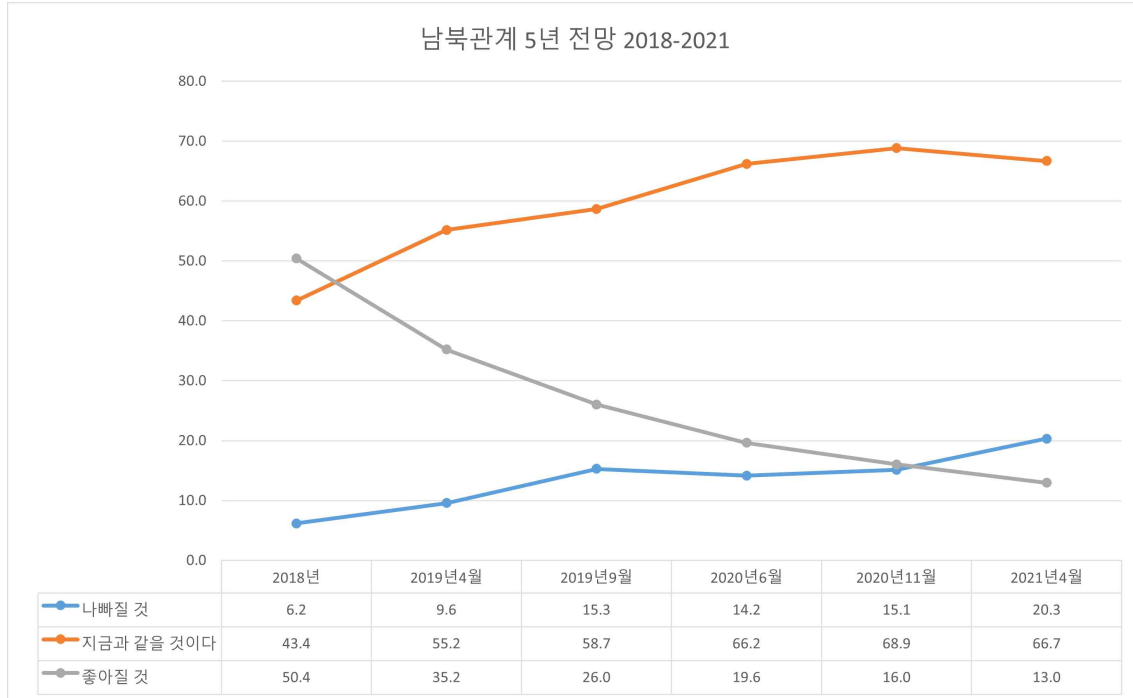
- 국가통일편익: “귀하는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개인통일편익: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각각 4점 척도(1=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 2=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 3=다소 이익이 될 것; 4=매우 이익이 될 것)
 - 두 문항에 대한 긍정응답을 “국가 통일편익”과 “개인 통일편익”으로 코딩

□ 통일은 국가에게 이익이나 개인에게는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 이 문항은 2014년부터 꾸준히 측정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 2021년 조사에서는 통일은 국가 전체에 이익이라는 의견이 64.5%, 응답자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29.0%이었음.
- 즉,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일은 국가 차원에서는 필요하나, 개인에게 꼭 필요하거나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
- 개인통일편익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계속 하락하다 이번 조사에서 소폭 반등함. (2019년 9월 39.5% → 2020년 11월 26% → 2021년 4월 29%)

6. 남북관계 5년 전망

<그림 8> 남북관계 5년 전망 2018~2021



□ “앞으로 5년간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점 척도로 측정(1=매우 나빠질 것; 2=다소 나빠질 것; 3=지금과 같을 것; 4=다소 좋아질 것; 5=매우 좋아질 것)

○ 부정응답을 “나빠질 것”, 긍정응답을 “좋아질 것”으로 코딩

□ 부정전망이 긍정전망을 처음으로 추월

○ 2018년 이 문항이 처음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5년 후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응답(20.3%)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13.0%)을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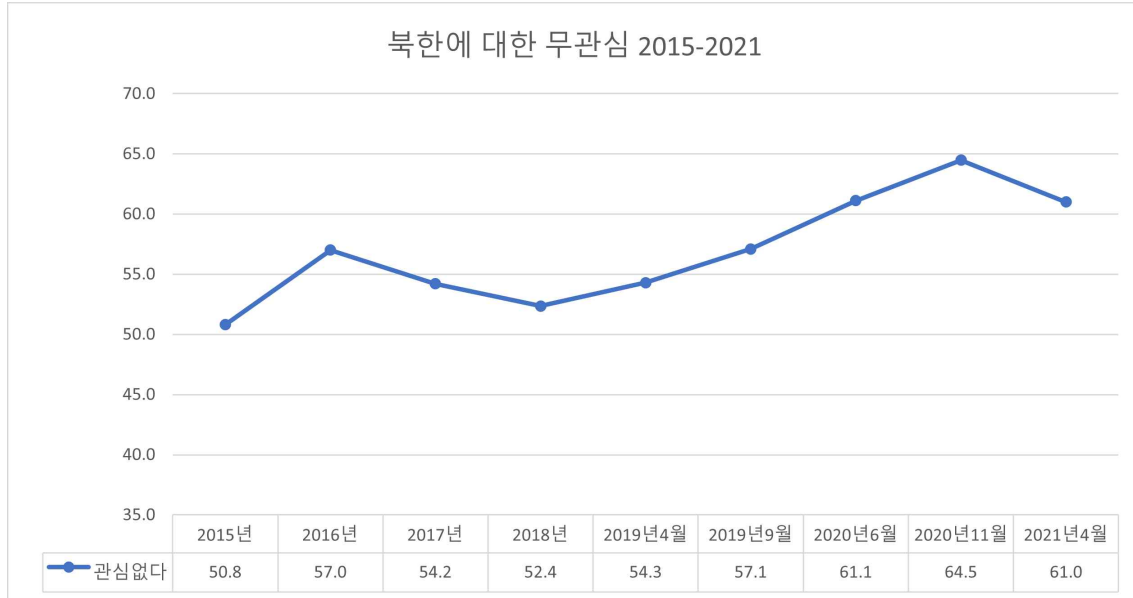
○ 이는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속되고 북한이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현 정국의 영향으로 보임.

○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나빠지거나 좋아지기보다 현 상황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함(66.7%).

○ 다음 절의 “북한에 대한 무관심”과 연결 지어 분석하면,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관심하고 기대 자체를 접는 경향이 커진 것으로 보임.

7. 북한에 대한 관심 혹은 무관심

<그림 9> 북한에 대한 무관심 2015~2021



□ “귀하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 4점 척도로 측정(1=전혀 관심없음; 2=별로 관심없음; 3=다소 관심있음; 4=매우 관심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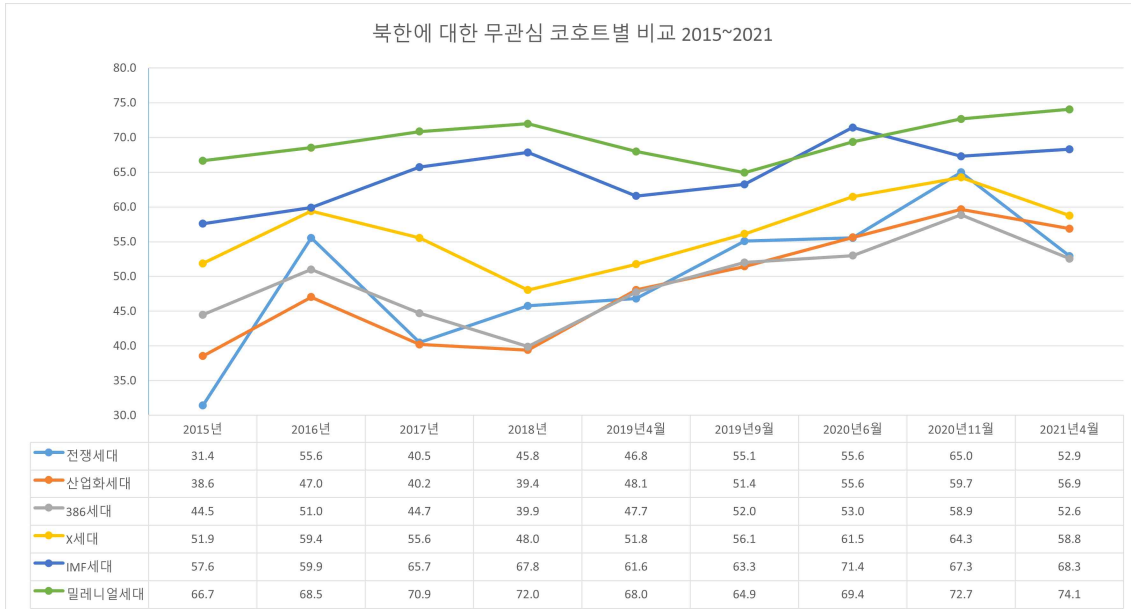
○ “전혀 관심없음”과 “별로 관심없음”을 위의 그래프에서 “관심없다”로 코딩하였음.

□ 61%의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무관심

○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남북관계 혹은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음.

○ 남북관계가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2017년에도 북한 문제에 관심없다는 응답이 54.2%였음.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되었던 2018년에도 여전히 52.4%는 무관심하다고 답변함.

<그림 10> 북한에 대한 무관심: 코호트별 비교 201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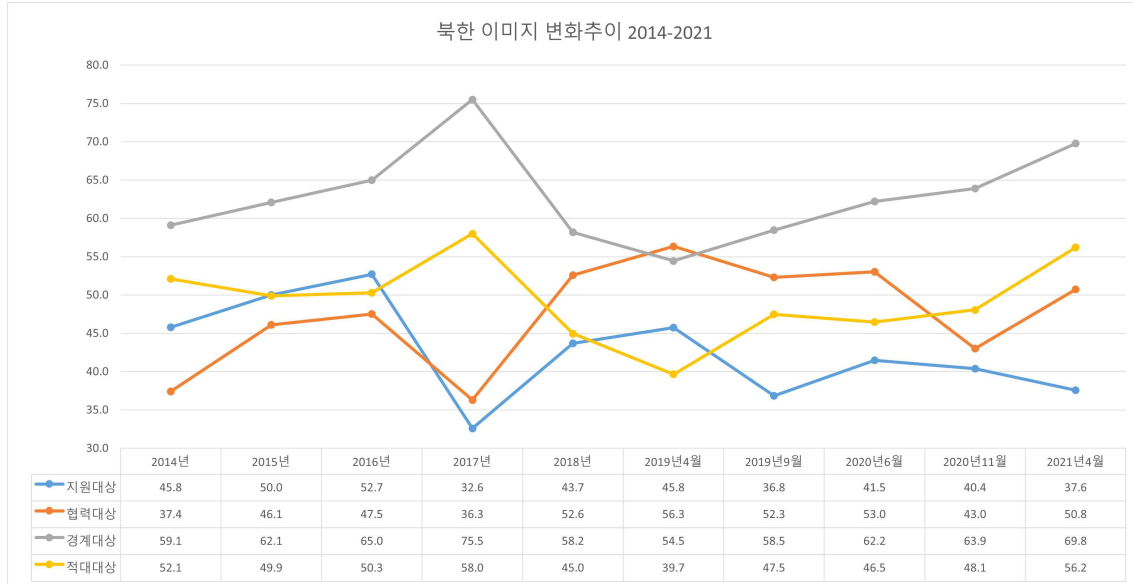


□ 밀레니얼세대의 74.1%가 북한에 무관심

- 북한에 대한 관심을 코호트로 나누어 분석하면 위의 그래프와 같음.
- IMF세대와 밀레니얼세대는 그 윗세대와 비교하여 뚜렷하게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높음.
 - 2021년 4월: IMF세대 68.3%, 밀레니얼세대 74.1%
- 이 젊은 세대에 비해 중장년층 세대는 상대적으로 북한에 관심이 높은 편임. 그러나 전쟁세대의 경우에도 52.9%가 북한에 무관심함.
- 통일과 북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하나의 징후라고 할 수 있음.

8. 북한의 국가 이미지

<그림 11> 북한 이미지 변화추이 201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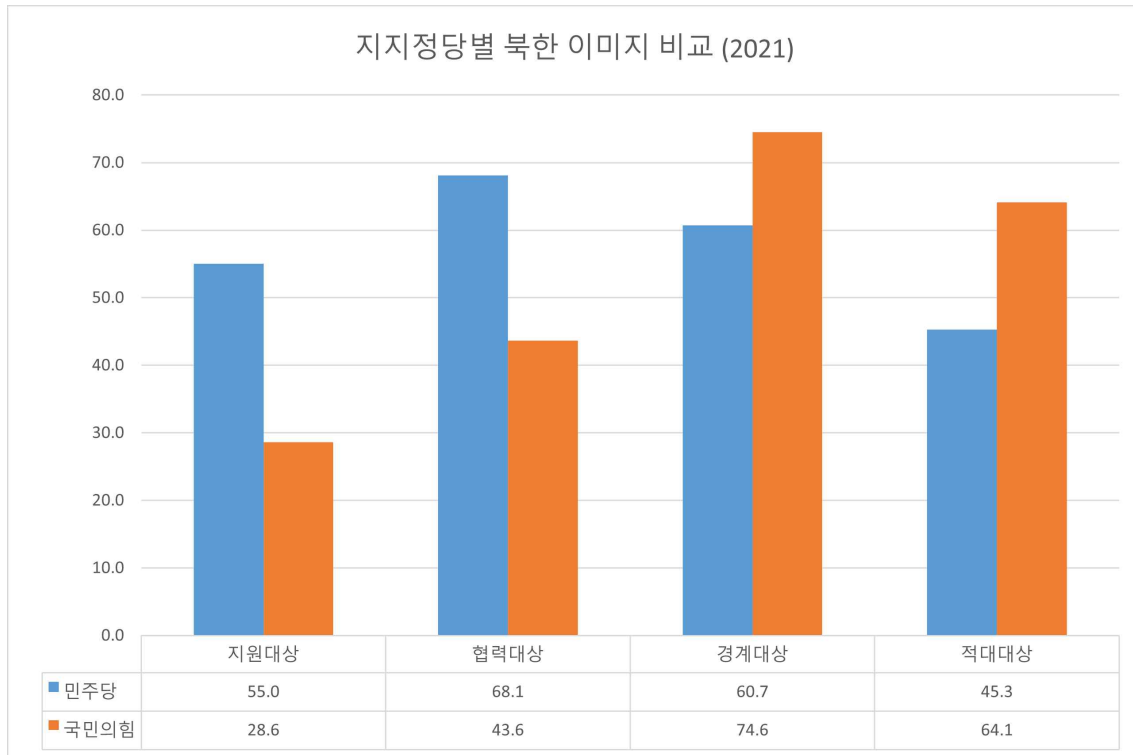
□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의 이미지로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을 제시함.
- 11점 척도로 측정(0=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중간; 10=매우 동의한다)
- 이 11점 척도를 3점 척도로 변환한 후, 긍정답변을 취합하여 위 그래프로 시각화했음.

□ 부정적 이미지의 계속된 증가 추세

- 북한을 적대대상, 혹은 경계대상으로 보는 응답비율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2019년 4월 조사 이후) 계속 증가 추세임.
- 반면 긍정이미지(협력대상, 지원대상)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하지만 협력대상 이미지의 경우 2020년 11월과 2021년 4월 사이 7.8%p 상승함(43.0%→50.8%).
- 협력대상 이미지 상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한이 상대적으로 도발을 자제하고 있고, 남북 및 북미관계가 현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의 호전을 예상했기 때문일 수 있음.
- 그러나 지원대상 이미지는 북한의 식량난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계속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하락함. 협력대상 이미지와 지원대상 이미지 변수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일 가능성 있음.

<그림 12> 지지정당별 북한 이미지 비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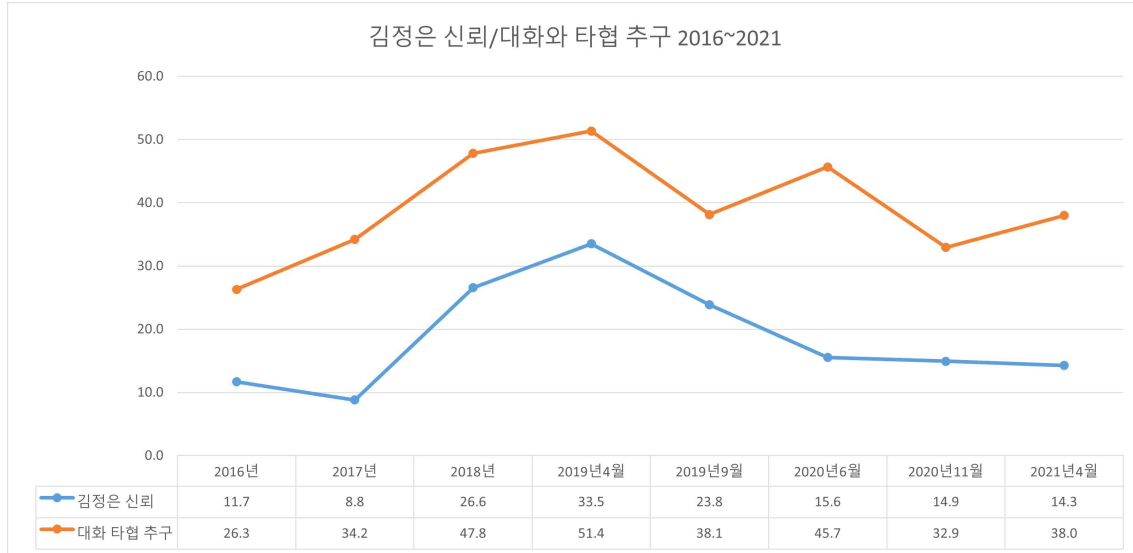


□ 지지정당별 북한 이미지 차이가 뚜렷

-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북한을 협력대상(68.1%)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음.
-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북한을 경계대상(74.6%)으로 생각함.
-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도 경계대상이 60.7%에 달했으며 국민의힘 협력대상 응답이 43.6%에 달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음.
- 즉, 지지정당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나, 이 차이가 과장되게 해석될 필요는 없음.

9.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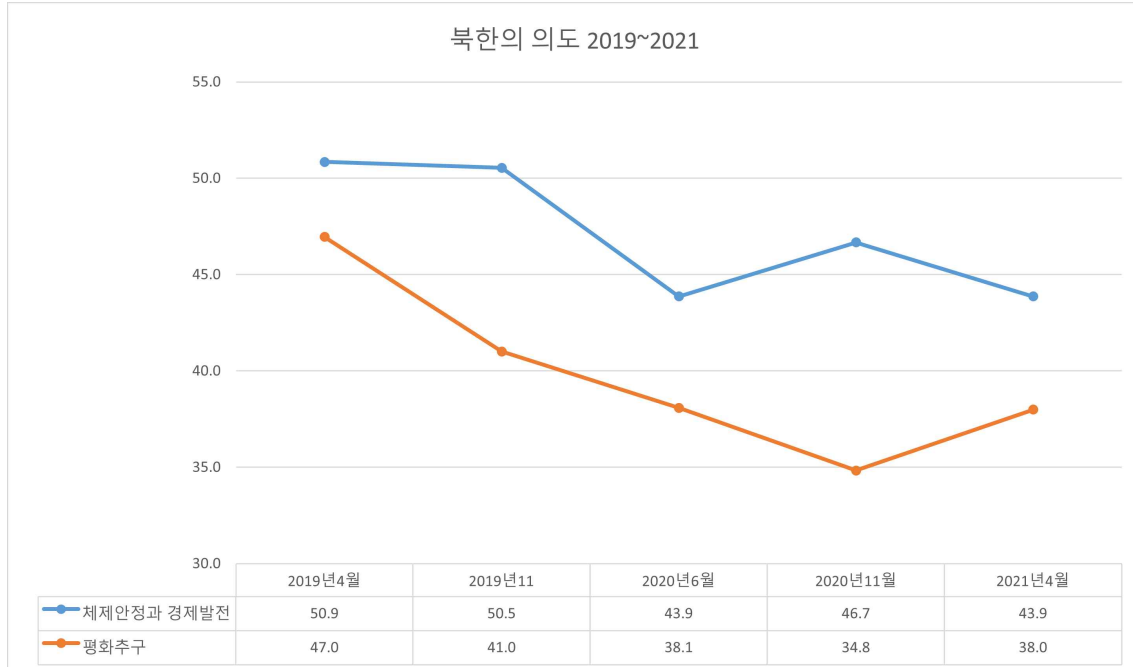
<그림 13> 김정은 신뢰 / 대화와 타협 추구 2016~2021



- ☐ 김정은 신뢰: “귀하는 현재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 ☐ 대화 타협 추구: “귀하는 위 질문과 관계없이 현재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두 문항 모두 5점 척도로 측정(1=전혀 그렇지 않음; 2=다소 그렇지 않음; 3=보통; 4=다소 그렇다; 5=매우 그렇다)
- ☐ 낮은 신뢰, 그러나 대화 노력 필요
 - 김정은 정권을 대화가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2021년 조사에서 14.3%에 그침. 2020년 이후 큰 변화 없음.
 - 그러나 이러한 낮은 신뢰와 관계없이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은 김정은 신뢰도의 두 배 가까운 38%임.
 - 남북관계 경색의 영향으로 신뢰도와 대화 타협추구가 모두 하락 추세임.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와 남북대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별개로 인식되고 있음.

10. 북한의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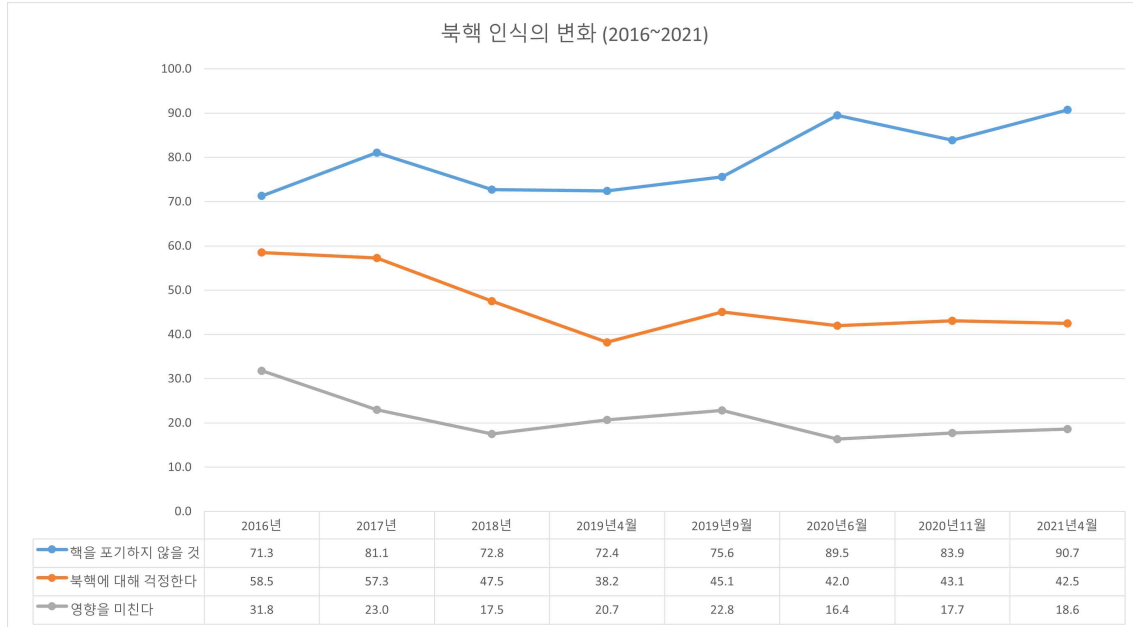
<그림 14> 북한의 의도 2019~2021



- ☐ 체제안정과 경제발전: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적화통일이라기보다는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이다.”
- ☐ 평화추구: “북한도 남한과의 갈등보다는 평화를 더 원하고 있다.”
 - 두 문항 모두 5점 척도로 측정(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 4=다소 동의; 5=매우 동의)
 - 각 문항에 대한 긍정 답변을 묶어 “체제안정과 경제발전”, “평화추구”라는 이름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로 시각화
- ☐ 북한의 적대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 증가 추세
 - 2019년 이 두 문항의 측정이 시작된 이후 같은 시기에 남북관계 경색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3.9%가 북한은 적화통일이 아닌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을 원한다고 인식함. 마찬가지로 38%는 북한도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함.

11. 북핵 인식

<그림 15> 북핵 인식의 변화 2016~2021



□ 북핵인식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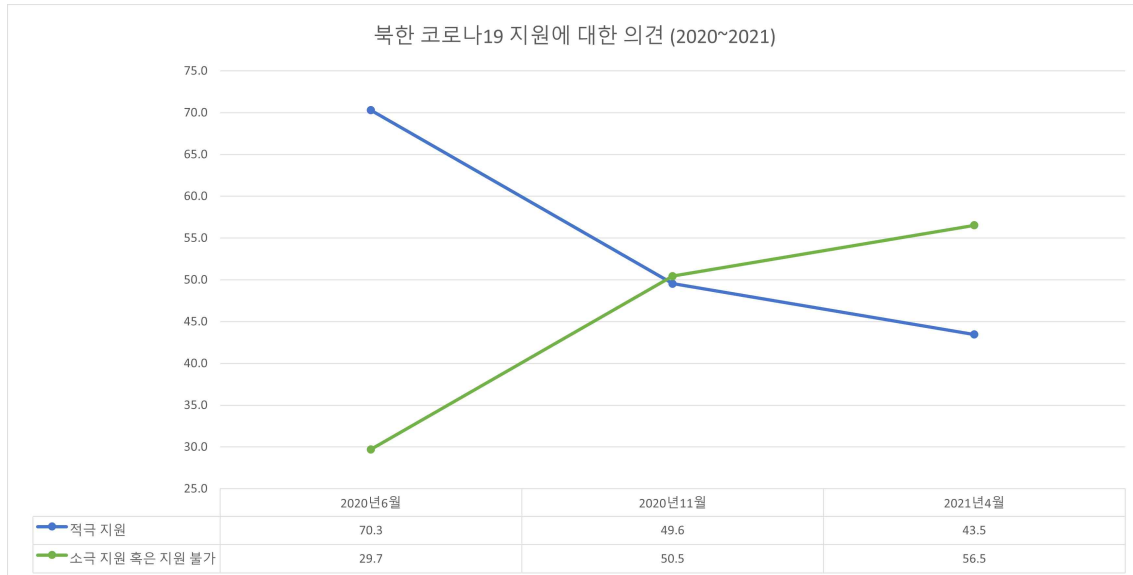
- “귀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3점 척도로 측정(1=조만간에 핵포기; 2= 장기적으로 핵포기; 3=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 “3=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을 위 그래프에 표시
- “귀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하십니까?”
 - 5점 척도로 측정(1=전혀 걱정하지 않음; 2=별로 걱정하지 않음; 3=보통; 4=다소 걱정; 5=매우 걱정)
 - “4=다소 걱정” 혹은 “5=매우 걱정”을 선택한 응답자를 위 그래프에 “북핵에 대해 걱정한다”로 표시
- “북한의 핵위협은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 5점 척도로 측정(1=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2=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3=보통; 4=다소 영향을 미침; 5=매우 영향을 미침)
 - “4=다소 영향을 미침” 혹은 “5=매우 영향을 미침”을 선택한 응답자를 위 그래프에 “영향을 미친다”로 표시

□ 남북관계의 부침에도 북핵 인식은 비교적 안정적

- 북핵 포기에 대한 회의감이 심화됨. 90.7%가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함.
-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42.5%가 북핵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북핵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도 18.6%에 그침.
- 이는 남북관계 대화단절과 경색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자제하는 등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에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임.

12. 북한 코로나19 지원

<그림 16> 북한 코로나19 지원에 대한 의견 2020~2021



□ “북한에도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코로나 19 관련해서 의료용품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점 척도로 측정(1=북한의 요청이 없더라도 한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북한이 먼저 요청을 한다면 지원해야 한다; 3=북한이 먼저 요청 하더라도, 비핵화나 경제협력 등의 약속을 받은 다음 지원해야 한다; 4=북한이 요청하더라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 1, 2번을 택한 응답자를 “적극 지원”, 3, 4를 택한 응답자를 “소극 지원 혹은 지원불가”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 코로나19 관련 북한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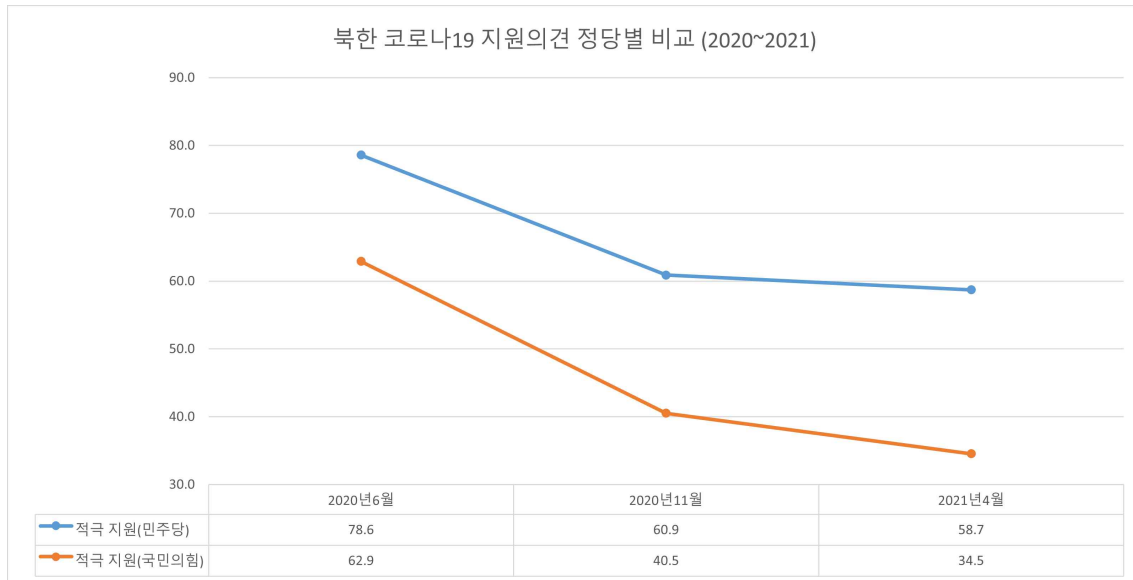
○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70.3%이었던 것에 비해 2021년 4월 조사에서는 43.5%로 대폭 하락함.

○ 반면 56.5%는 소극적 지원 혹은 지원불가를 선택함.

○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한국정부의 지원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있음.

○ 코로나19 와중에도 북한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감행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것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임.

<그림 17> 북한 코로나19 적극지원 정당별 비교 202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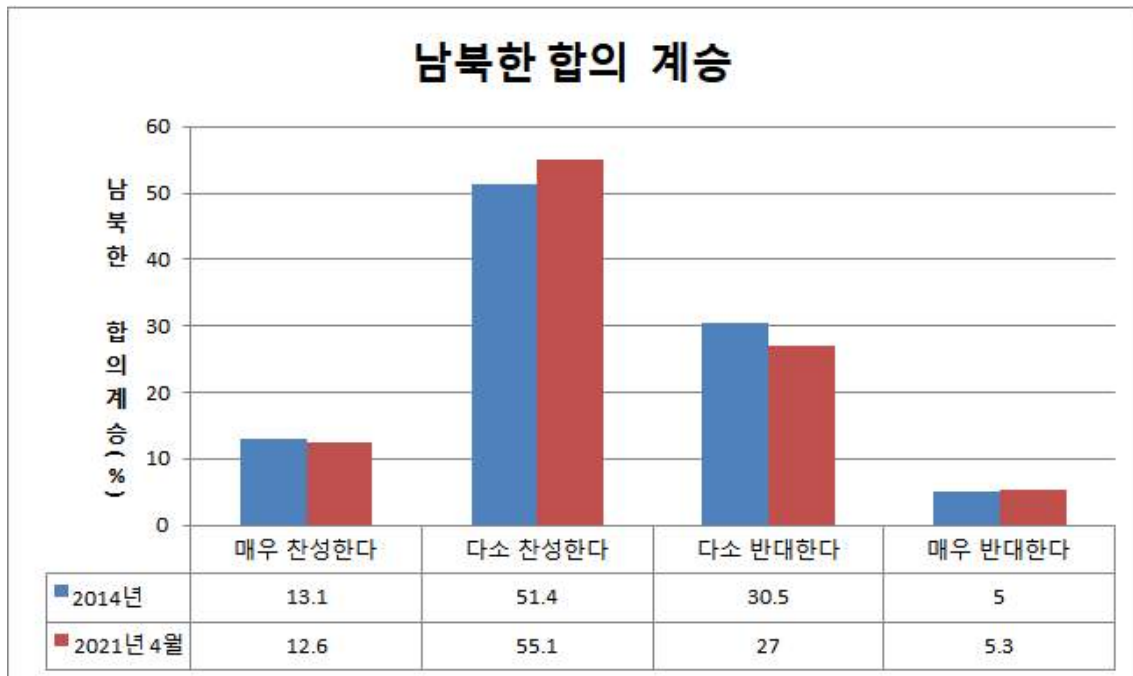
□ 정당별로 북한 코로나19 지원에 대한 뚜렷한 차이

-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해 북한 지원에 더욱 적극적임.
-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에도 2020년 6월에 78.9%에 달하던 적극지원 찬성이 올해 조사에서는 58.7%로 20.2%p 하락하였음.
- 북한이 한국정부의 대화 요청에 계속 불응하고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여론의 지지 자체가 불안정해질 가능성 있음.

III.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1. 남북한 합의 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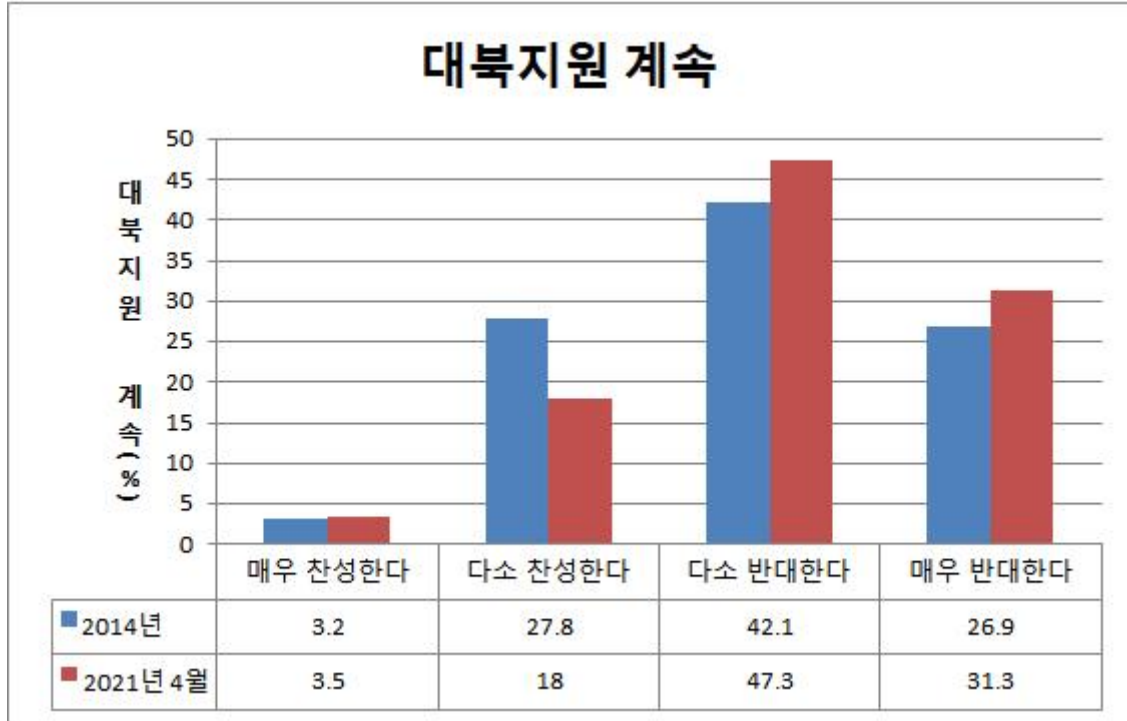
<그림 18> 남북한 합의 계승



-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4점 척도, 1점= 매우 찬성한다, 4점=매우 반대한다)라는 진술에 67.7%의 응답자가 동의(매우 찬성, 다소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 같은 문항이 조사되었던 7년 전의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약 3%p 증가한 것으로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 이러한 조사결과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라는 우리국민의 바람이 매우 안정적임을 보여줌.
- 또한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한반도 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데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 될 수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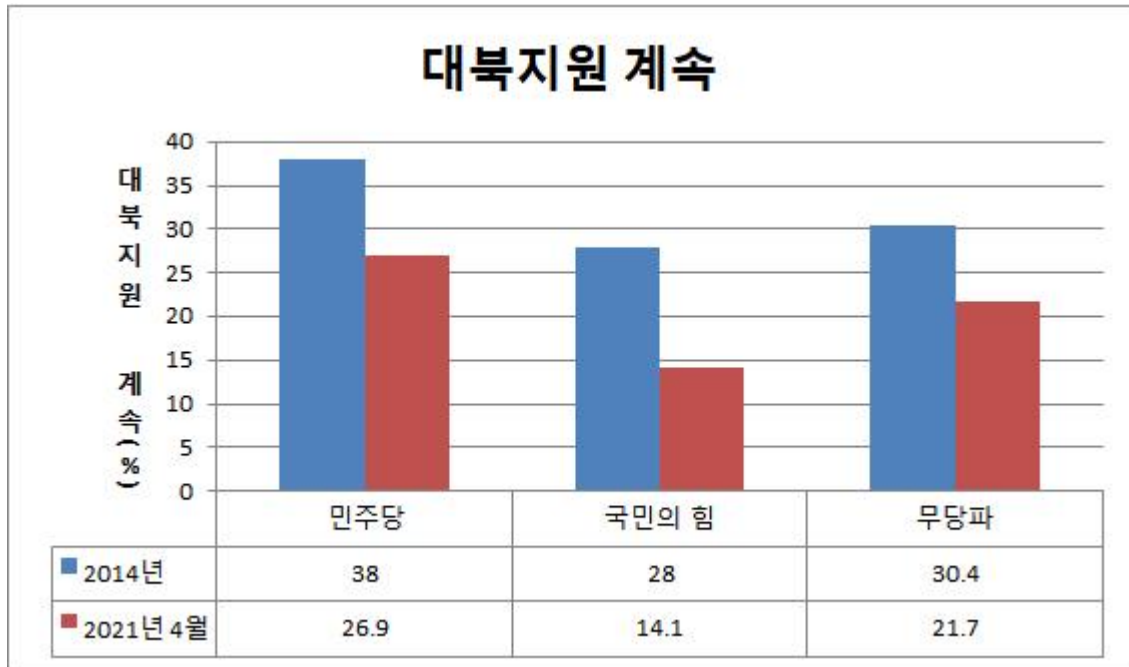
2. 대북지원 계속

<그림 19> 대북지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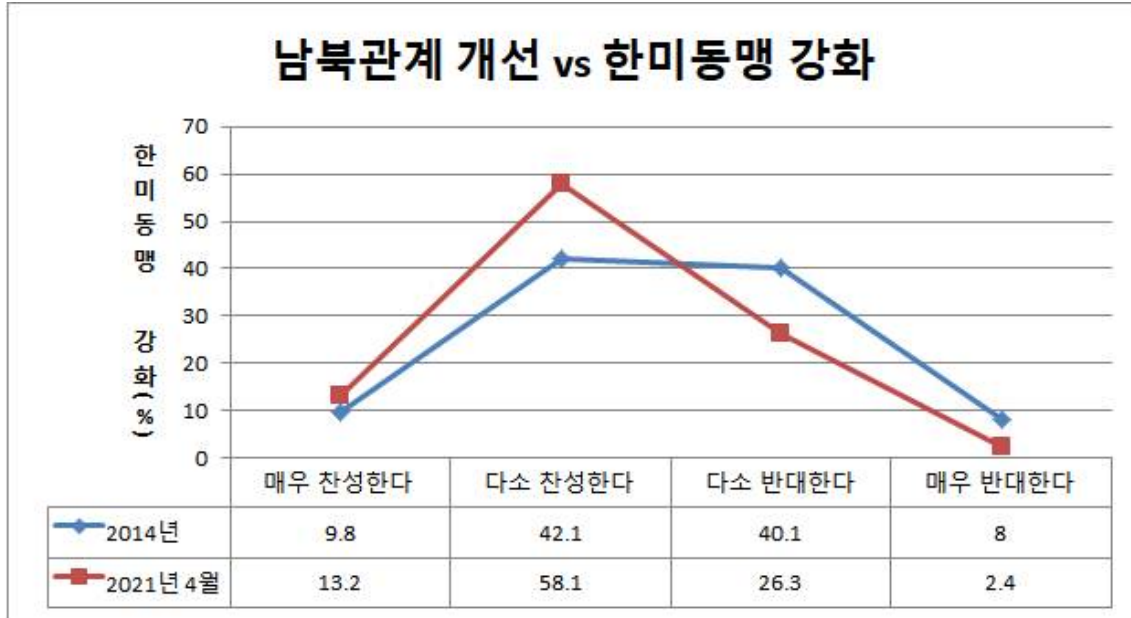
-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대북지원은 계속하여야 한다”(4점 척도, 1점=매우 찬성한다, 4점=매우 반대한다)라는 진술에 동의하는(매우 찬성, 다소 찬성) 응답자가 21.5%로 조사됨.
 - 이는 지원에 반대하는 비율 78.6%의 3분의 1수준임.
 -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부정적 응답 비율은 9.6P% 증가함.
 - 즉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동안 우리 국민의 대북지원 지지는 감소함.
 - 지지정당에 따라 살펴보면 지지정당과 관계없이 지원에 찬성하는 비율이 감소함. <그림 20>
 -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실험을 계속하는 경우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그림 20> 대북지원 계속: 지지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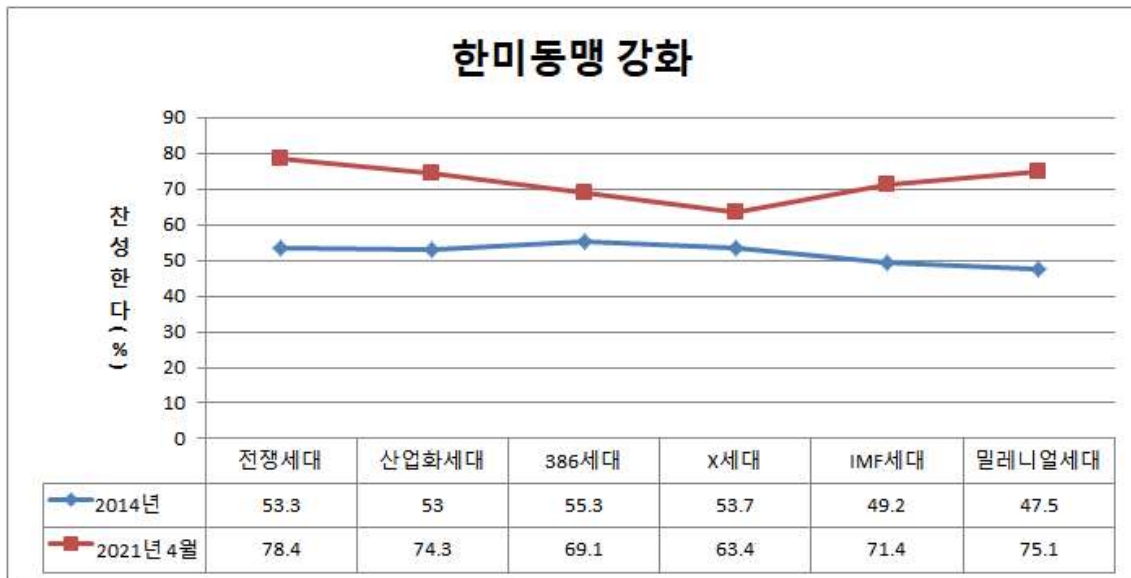
3. 남북관계 개선 vs 한미동맹 강화

<그림 21> 남북관계 개선 vs 한미동맹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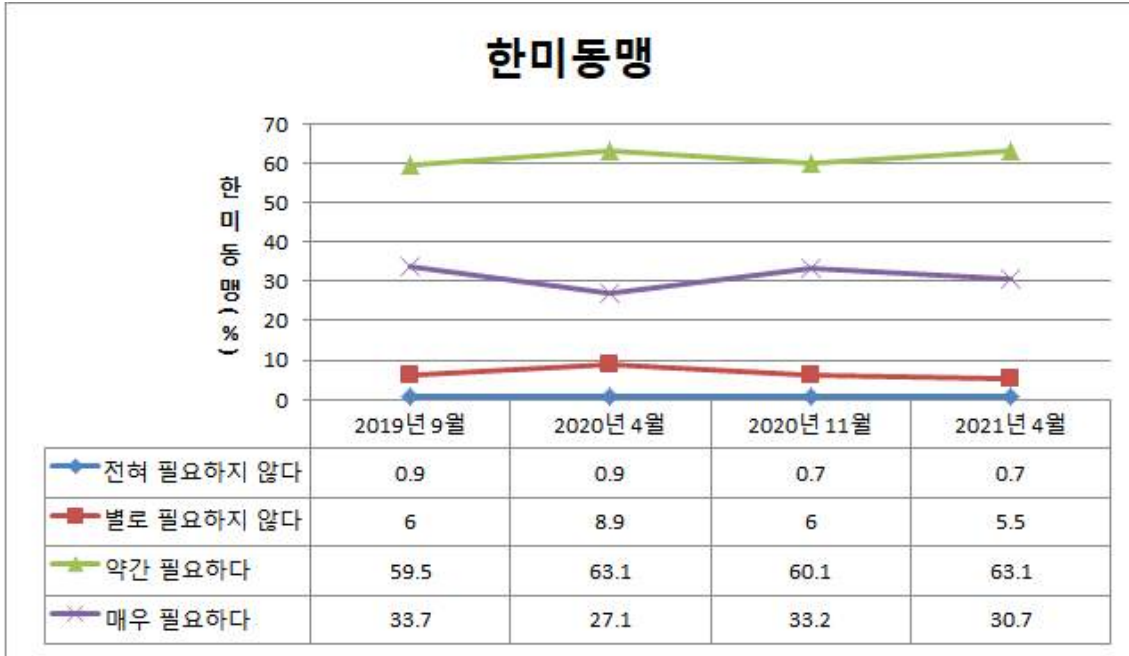
- “남북관계 개선보다 한미동맹 강화가 더 중요하다”(4점 척도, 1점= 매우 찬성한다, 4점=매우 반대한다)라는 진술에 71.3%의 응답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4년 조사결과 51.9% 보다 약 20%p 증가한 것으로 2021년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 개선보다 한미동맹 강화를 더 우선시 하고 있음.
- 두 조사 시기 사이에 일어난 지속적인 북한의 핵개발 및 실험,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중갈등, 그리고 미중 경쟁 심화가 미국과의 동맹 강화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을 증가 시킨 것으로 보임.
 - 즉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이 체감한 현실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더 실현가능하고 실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인식 변화는 전 세대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밀레니얼세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함. <그림 22>
 - 이는 밀레니얼세대의 실용주의적 성향과 민족주의에 기반 한 남북관계 인식 약화가 원인 인 것으로 판단됨.
- 남북관계 개선보다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전 세대 걸쳐 높게 조사된 것은 다음에 논의될 한미동맹의 지속적 필요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지지율에서도 확인됨. <그림 22>

<그림 22> 남북관계 개선 vs 한미동맹 강화: 코호트



4. 한미동맹 필요성

<그림 23> 한미동맹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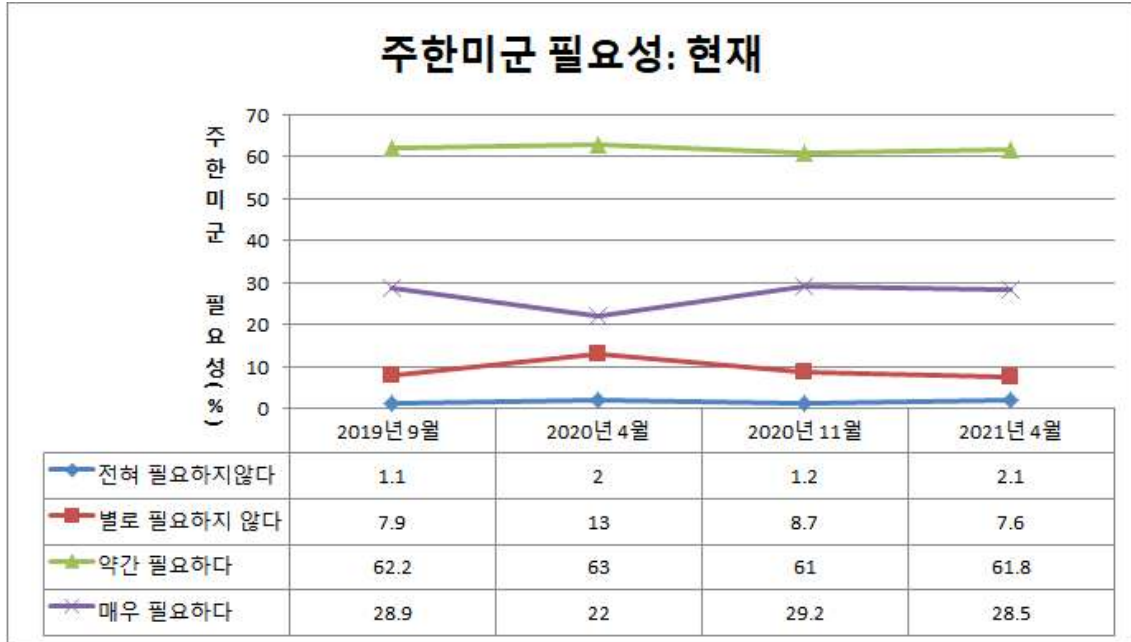
- “귀하는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4점 척도,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4점=매우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93.8%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앞선 3번의 조사에서도 응답자 90% 이상이 미래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 힘 지지자와 무당파가 민주당 지지자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로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1> 한미동맹 필요성: 지지정당(%)

	2019년 11월	2020년 4월	2020년 11월	2021년 4월
민주당	93.5	88.9	93.6	90
국민의 힘	92.3	92.3	95.2	96.4
무당파	92.7	91.1	93	95.2

5. 주한 미군 주둔 필요성

<그림 24> 주한 미군 필요성



□ “귀하께서는 주한미군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4점 척도,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4점=매우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90.3%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이러한 결과를 한미동맹 필요성에 대한 높은 지지비율과 연관시켜 해석하면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을 현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질문을 “통일 후”로 시점을 달리해 조사한 결과 주한 미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귀하께서는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4점 척도,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4점=매우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47.9%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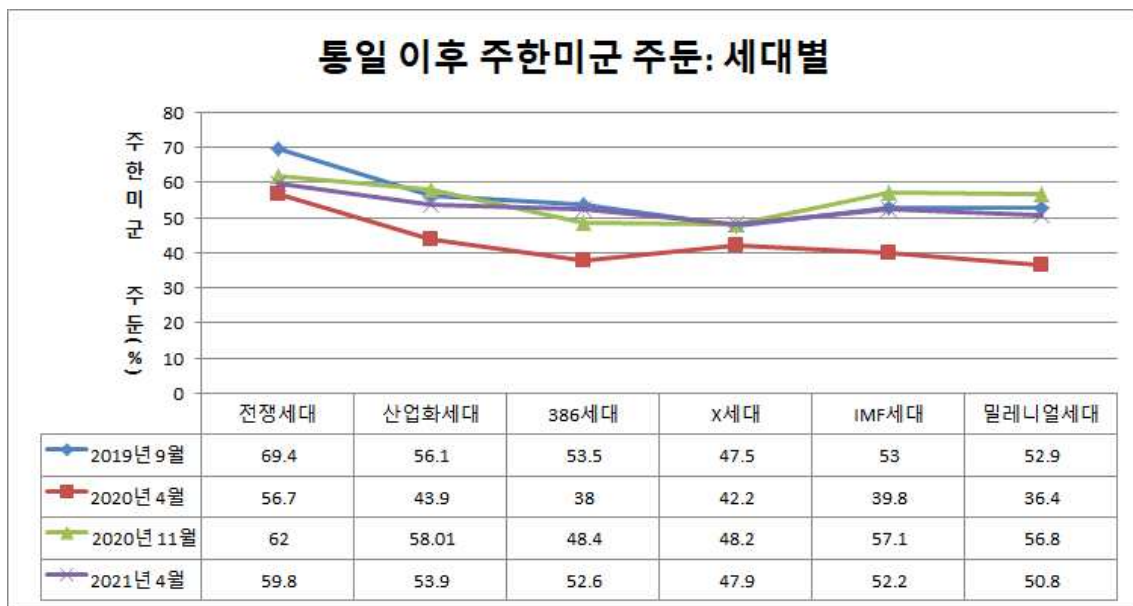
▪ 이는 현재 미군주둔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90.3%에 비해 약 43%p 정도 낮은 비율임.

<표 2> 통일 후 주한미군 필요성(%)

	2019년 9월	2020년 4월	2020년 11월	2021년 4월
필요하다	54.1	41.6	54.4	52.2
필요없다	45.9	58.4	45.7	47.9

-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은 미군주둔의 필요성을 민족주의와 실익 양면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우리 국민은 통일을 민족주의적 자주국방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됨.
 - 동시에 통일 후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우리의 실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도 해석 할 수 있음.
 - 통일 여부에 따라 미군주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 같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지역안보 차원보다 북한에 대한 안보 문제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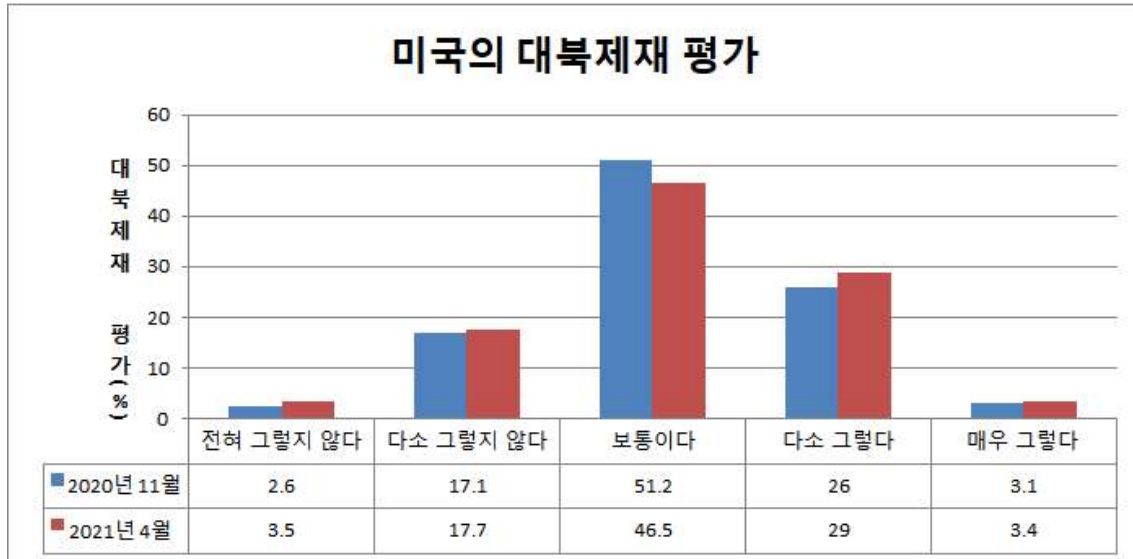
<그림 25> 통일 이후 주한 미군주둔: 세대별



- 그런데 2020년 4월 조사 이후 이루어진 2번의 조사에서 통일 이후 미군주둔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증가 한 것에 주목해야 함. <표 2>
 - 전 세대에 걸쳐 이러한 변화가 목격됨. <그림 25>
 - 최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미중 갈등 심화 그리고 남북관계 경색이 우리 국민의 안보 위기감을 자극한 반면 미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강화시킨 것으로 보임.
 - 이는 앞서 논의한 남북관계 개선보다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 수가 증가한 것과 함께,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기대로 해석할 수 있음.

6. 미국의 대북제재 평가

<그림 26> 미국의 대북제재 평가



-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문제를 풀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5점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라는 문항에 ‘보통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유보적 입장의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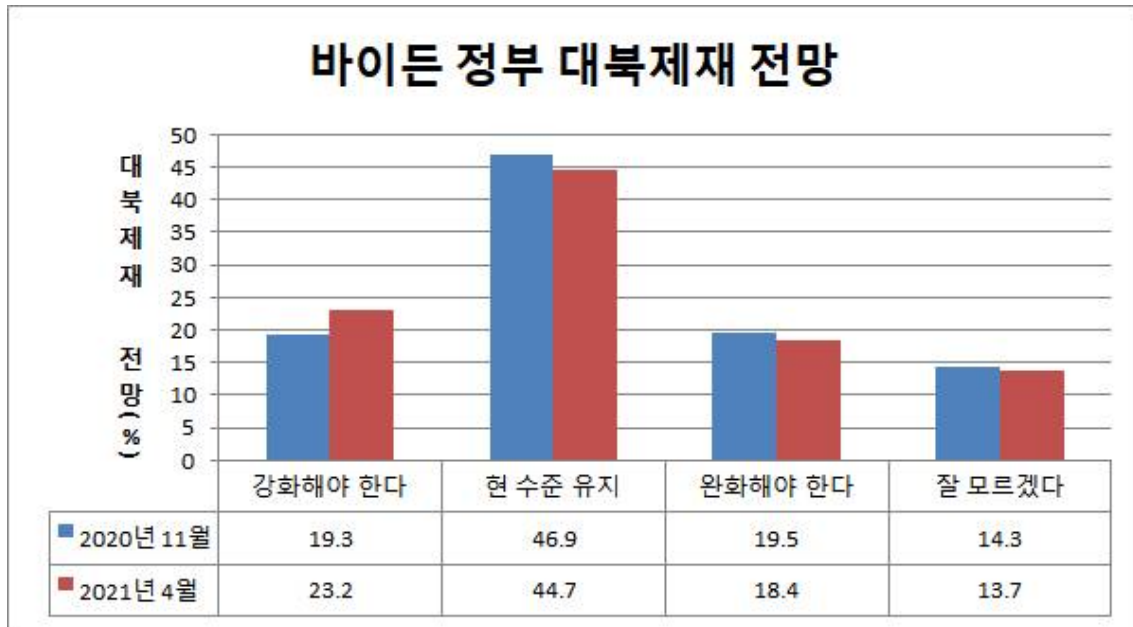
- 이러한 높은 비율의 유보적 인식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전망에도 전이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구체적으로 “귀하께서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4.7%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27>

○ 지지정당이나 코호트와 관계없이 작년 11월 조사와 마찬가지로 ‘현 수준 유지’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됨.

- 작년 11월 조사와 비교해 보면 ‘현 수준 유지’ 응답자 비율이 2.2%p 줄어든 반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4%p 증가함.
-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5.2%에서 32.2%로, 국민의 힘 지지자의 경우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2%에서 33.6% 증가함. <표 3>

<그림 27> 바이든 정부 대북제재 전망



○ ‘완화해야한다’는 응답자만 분석해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

<표 3> 바이든 정부 경제제재 전망: 지지 정당-완화해야 한다(%)

	민주당	국민의 힘	무당파
2020년 11월	48.4	21.7	29.9
2021년 4월	54.6	13.6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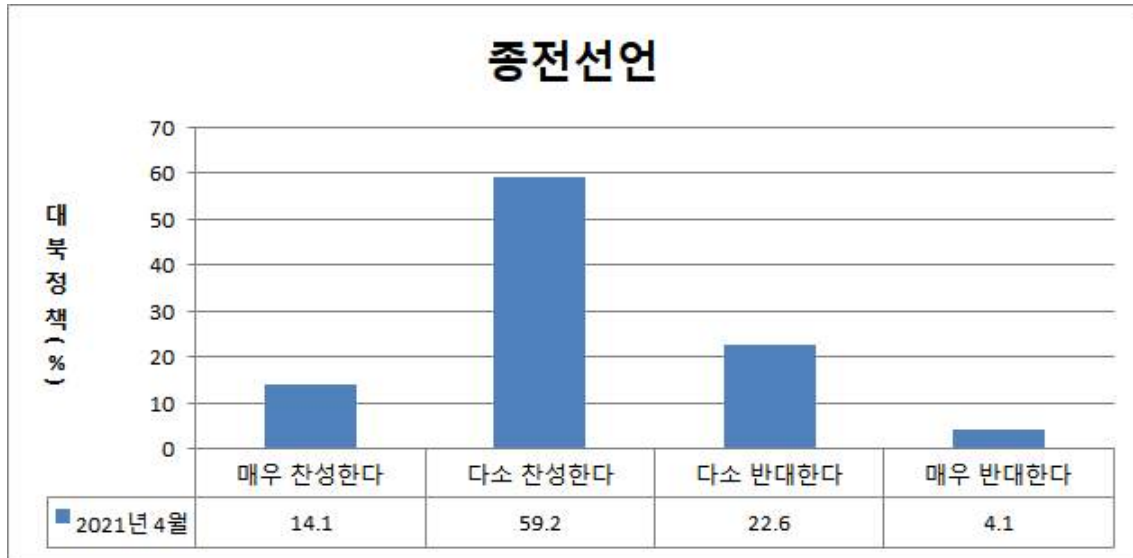
* ‘완화해야 한다’ 응답자 수: 2020년 11월 조사 - 184명

2021년 4월 조사 - 176명

- 바이든 정부의 향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지지정당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향후 우리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대북제재 완화노력을 본격화할 경우 지지정당에 따른 국민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
- 다만 ‘현 수준 유지’를 원하는 유보적 입장의 국민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

7. 종전선언

<그림 28> 종전선언



-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종전선언을 통해 휴전상태로 남아 있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73.3%가 동의
 - 절대 다수 국민은 미국의 공식적 종전선언을 바라고 있음.
 - 이러한 우리 국민의 바램은 지지정당에 따른 특징적 차이가 없음. <표 4>

<표 4> 종전선언: 지지정당(%)

	민주당	국민의 힘	무당파
찬성	73.8	71.8	73.7
반대	26.2	28.2	26.3

- 코호트별 분석결과 역시 전 세대에 걸쳐 70% 이상이 우리정부가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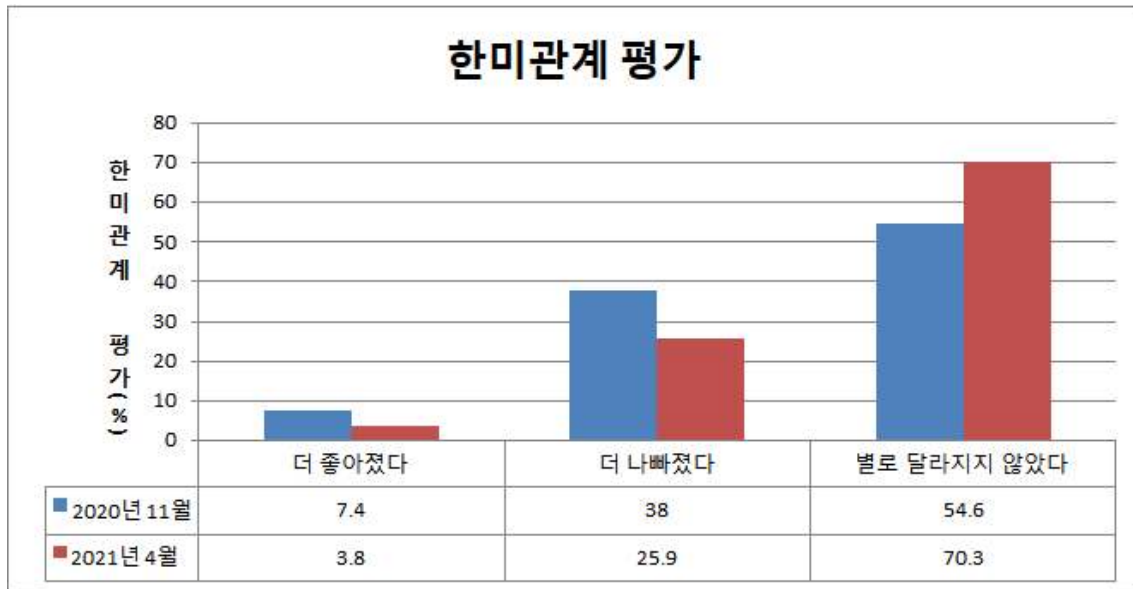
<표 5> 종전선언: 코호트(%)

	전쟁세대	산업화세대	386세대	X세대	IMF세대	밀레니얼세대
찬성	75.5	71.9	73.2	73.2	72.7	74.1
반대	24.5	28.1	26.8	26.8	27.3	25.9

- 밀레니얼세대가 전쟁세대와 함께 가장 높은 비율로 우리정부가 종전선언을 위해 설득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5>

8. 한미관계 평가

<그림 29> 한미관계 평가



□ “지난 1년 동안 한미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지난 해 11월 조사 보다 16%p 많은 70.3%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

○ 반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12%p 줄어든 25.9%로 조사됨.

○ 더 나빠졌다고 답한 응답자의 43.9%는 나빠진 이유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있다고 응답 <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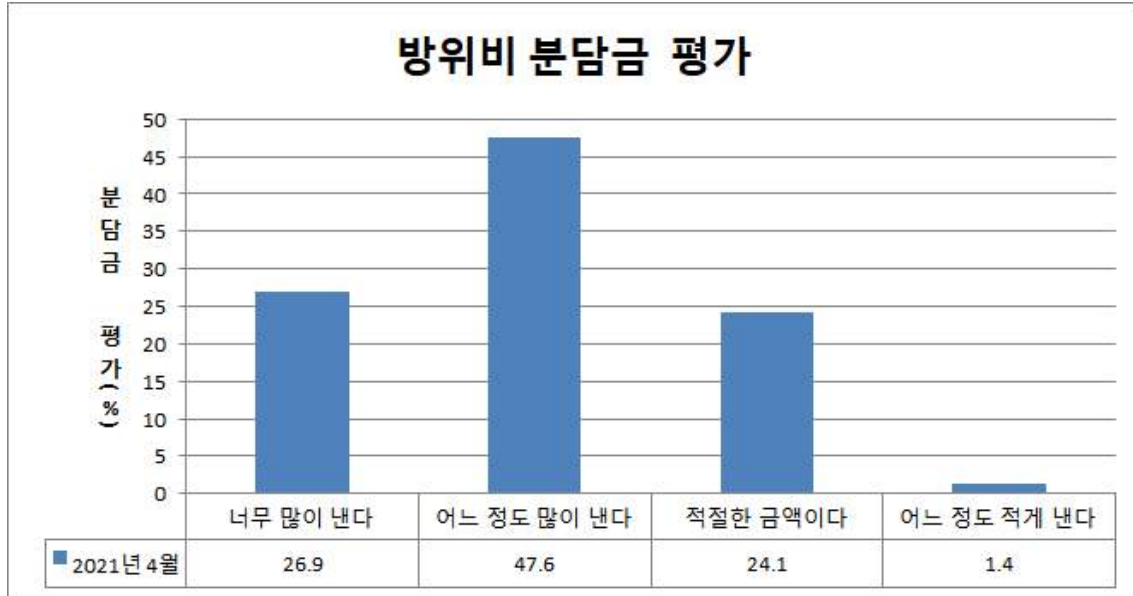
- 2020년 11월 조사에서 미국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3%로 가장 높았던 것과는 대조적임.
- 이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이 국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상외교로 복귀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소통이 활발해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같은 한미 간 문제가 해결되면서 미국이 한미관계를 나쁘게 만드는데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표 6> 한미관계가 나빠진 이유(%)

	미국 때문	한국 때문	한미 모두 때문	국제환경 때문
2020년11월	50.3	8.6	31.4	9.7
2021년 4월	28.9	17.3	43.9	10

9. 방위비 분담금 평가

<그림 30> 방위비 분담금 평가



□ “최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증액하기로 한 분담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점 척도, 1= 한국이 너무 많이 낸다, 5=한국이 너무 적게 낸다)라는 질문에 74.5%의 응답자가 ‘많이 낸다’고 답함.

○ ‘한국이 너무 적게 낸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0명으로 조사됨.

○ 지지 정당에 관계없이 분담금 인식에 대한 평가 양상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됨. <표 7>

<표 7> 방위비 분담금 평가: 지지정당(%)

	민주당	국민의 힘	무당파
많이 낸다	76.5	73.7	73.7
적절한 금액이다	22.2	25.5	25.5
적게 낸다	1.3	0.9	0.9

○ 코호트별로 살펴봐도 분담금 인식에 대한 평가 양상은 유사함. <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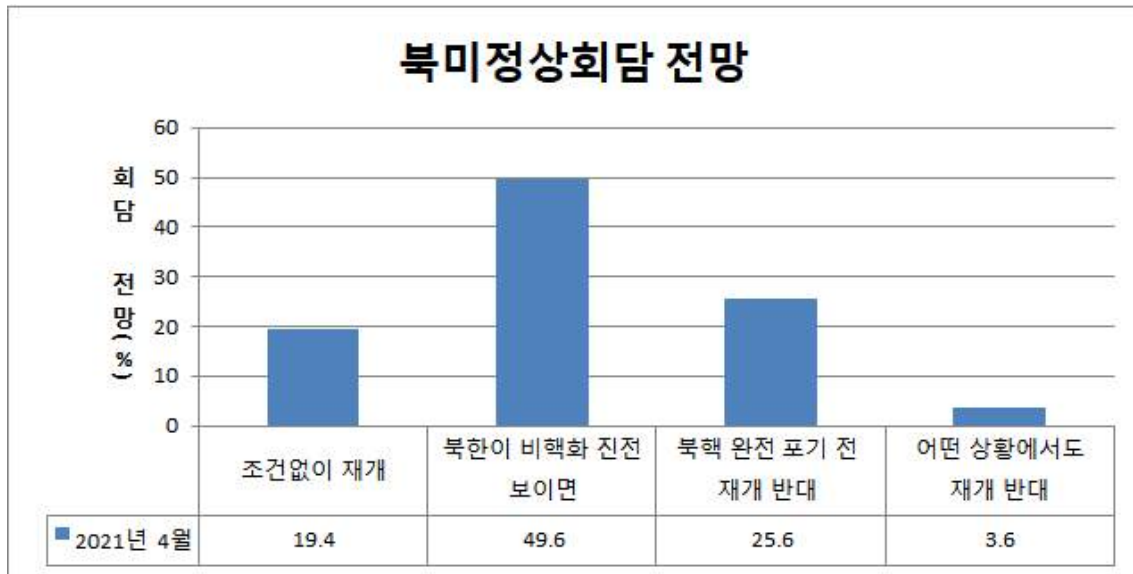
- 다만 밀레니얼세대의 방위비 분담금 평가에 대한 응답 분포양상이 전쟁세대와 가장 유사하게 나온 점이 흥미로움.

<표 8> 방위비 분담금 평가: 코호트(%)

	전쟁세대	산업화 세대	386세대	X세대	IMF세대	밀레니얼 세대
많이 낸다	71.6	77.3	75.3	75.8	76.4	69.7
적절한 금액	26.5	21.6	22.7	21.7	23.6	29.7
적게 낸다	2	1.2	2.1	2.6	0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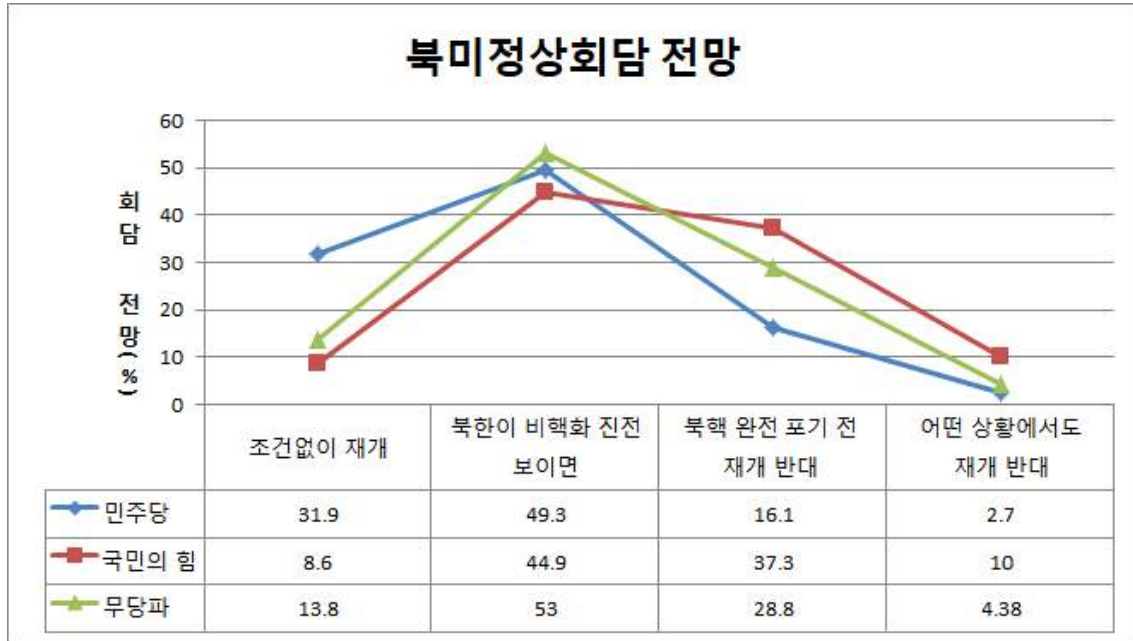
10. 바이든 북미정상회담 전망

<그림 31> 북미정상회담 전망



- “귀하께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69%가 긍정적 태도를 보임.
- 하지만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약 50%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 실질적인 진전을 보인다면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
 - 즉 과반의 응답자가 ‘조건부 회담’ 개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재개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의 약 두 배 가까운 비율임.
- 북한이 핵무기 문제에 진전을 보이거나 또는 완전히 포기할 때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75%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는 국민 대다수는 북한 핵문제를 북미정상회담의 주요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북핵문제의 진척이 없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노력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함.
 - 그리고 이러한 조사 결과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법인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바텀업(bottom-up) 방식’ 외교를 우리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함.

<그림 32> 북미정상회담 전망: 지지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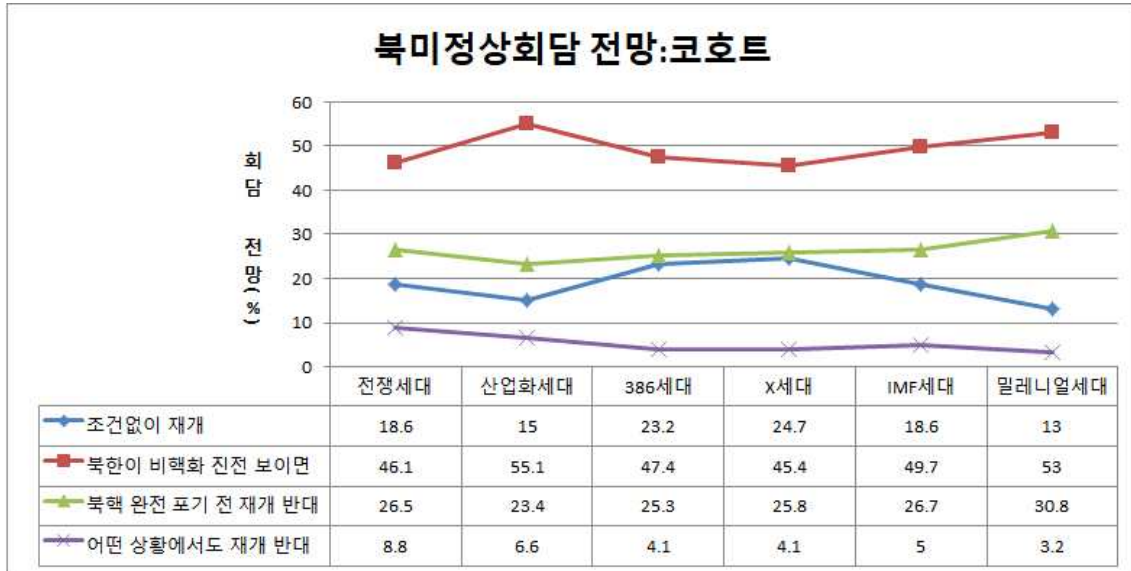


- 지지정당과 관계없이 모두 ‘조건부 재개’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하지만 다른 응답에 대해서는 지지정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구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는 ‘조건부 재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이 “조건 없이 재개 (32%)”, 국민의 힘 지지자의 경우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재개해서는 안된다(37%)”로 조사됨.
 - 무당파의 경우도 약 1/3에 가까운 29%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했을 때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답함.
 - 이러한 결과는 지지정당을 기반으로 한 관련 여론을 고려하면서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추진노력을 해야 함을 시사
- 밀레니얼세대는 전쟁세대보다도 높은 비율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정상회담을 재개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3>
 - 한국전쟁을 겪은 전쟁세대의 경우 북핵으로 인한 위기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세대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전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2021년 조사에서도 전쟁세대는 북한의 핵위협을 가장 높은 비율(52.9%)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다른 세대보다 북핵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은 밀레니얼세대가 높은 비율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북미대화 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 세대의 실리주의적인 성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대신 밀레니얼세대는 전쟁세대와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로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

을 회의적으로 봄. (2021년 4월 조사: 밀레니얼세대-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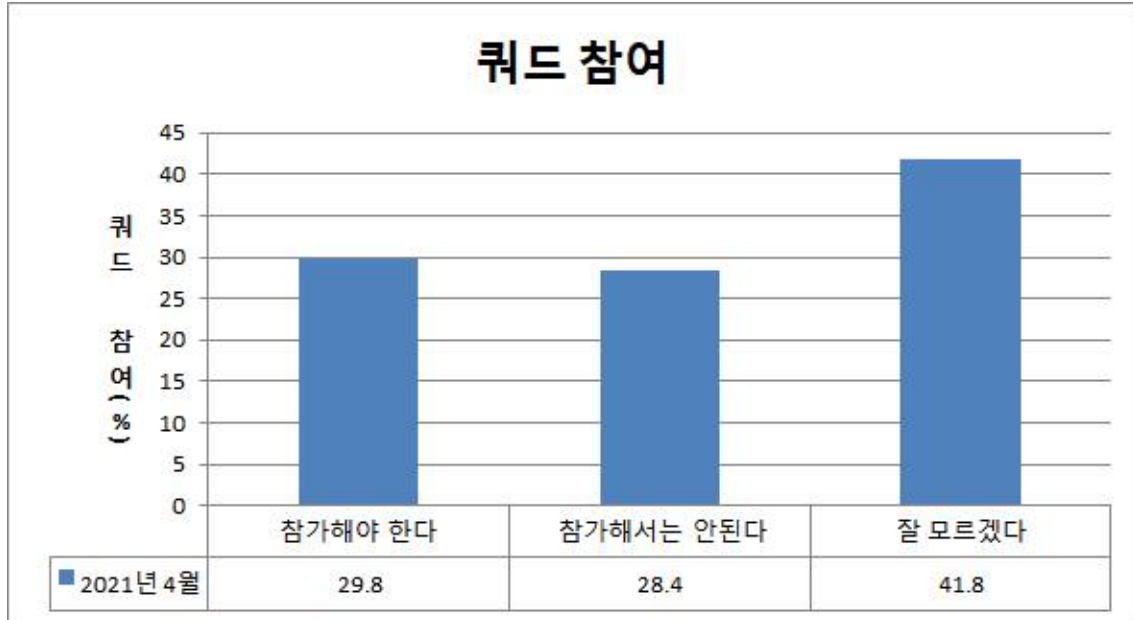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얼세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북미정상회담 재개 조건으로 북핵 포기를 선택한 것은 북핵문제에 실질적 진전 없이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비용(시간, 외교력 등)이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33> 북미정상회담 전망: 코호트



11. 미국인식: 쿼드참여

<그림 34> 쿼드 참여



-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4개국의 모임인 ‘쿼드(Quad)’를 결성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도 이 쿼드에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한국이 쿼드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약 42%의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임.
- 이러한 결과는 쿼드 참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어려운 입장이 국민들 인식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쿼드 참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의 국민이 많다는 조사 결과는 향후 정부가 쿼드와 관련해 미국과 어떻게 협의해 나가느냐에 따라 관련 여론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음을 시사

<표 9> 쿼드 참여: 지지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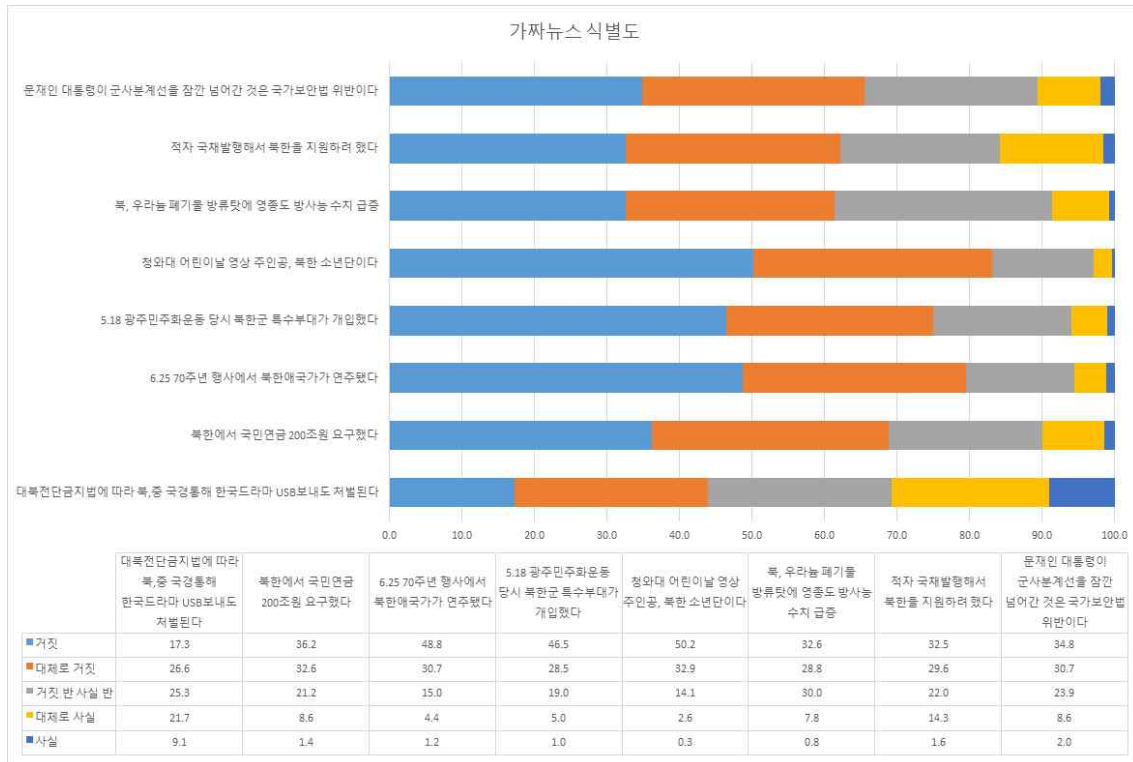
	민주당	국민의 힘	무당파
참가해야 한다	27.2	36.4	29.3
참가해서는 안된다	37.6	24.1	22.1
잘 모르겠다	35.2	39.6	48.6

- 지지정당에 따라 퀴드 참여에 대한 선호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비율이 36.7%로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비율(35.2%)보다 높음.
 - 국민의 힘 지지자와 무당파의 경우는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 하지만 국민의 힘 응답자의 경우는 ‘참가해야 한다’는 응답도 36.4%로 매우 높게 조사됨.
- 따라서 정부는 퀴드 참여 여부를 공식화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나, 관련해 한미관계가 불편해 지는 경우가 생기면 지지정당을 중심으로 국민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함.

IV. 북한관련 가짜뉴스의 확산

1. 가짜뉴스 식별도

<그림 35> 가짜뉴스 식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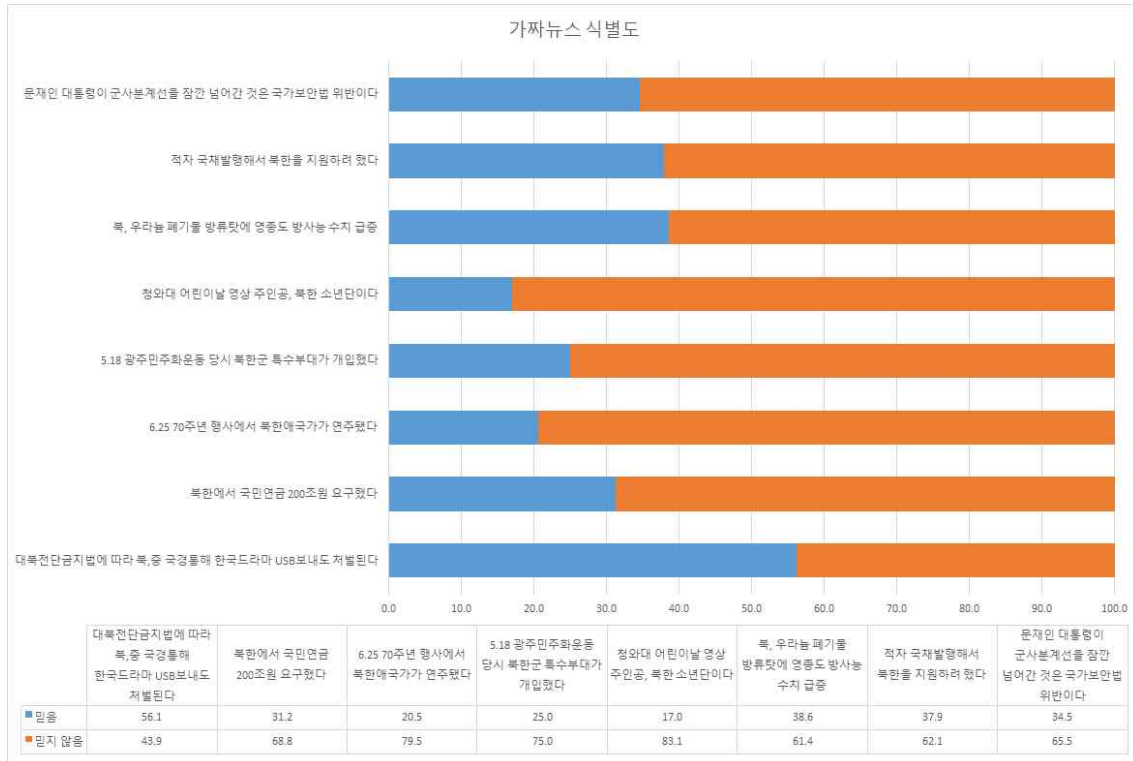
□ “아래는 북한과 관련되어 보도된 최근 언론기사 혹은 인터넷 뉴스의 제목들입니다. 귀하가 보시기에 이 내용들이 거짓에 가까운지 혹은 사실에 가까운지 판단해 주십시오.”

- 1) 대북전단 금지법에 따라 북·중 국경 통해 한국드라마 USB 보내도 처벌된다
- 2) 북한에서 국민연금 200조원 요구했다
- 3) 6.25 70주년 행사에서 북한 애국가가 연주됐다
- 4)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
- 5) 청와대 어린이날 영상 주인공, 북한 소년단이다
- 6) 북, 우라늄 폐기물 방류 탓에 영종도 방사능 수치 급증
- 7) 적자 국채발행해서 북한을 지원하려 했다
- 8)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잠깐 넘어간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http://factcheck.snu.ac.kr/>)에서

가짜뉴스로 판정한 8개의 뉴스에 대해 응답자로 하여금 5점 척도 측정(1=거짓, 2=대체로 거짓, 3=거짓 반 사실 반, 4=대체로 사실, 5=사실)

<그림 36> 가짜뉴스 식별도: 2점 리코딩



○ 개별문항 가짜뉴스 식별도 2점 척도 리코딩 (1~2=믿지 않음, 3~5=믿음)

□ 2021년 추이

- “청와대 어린이날 영상 주인공, 북한 소년단이다”에 대한 식별도가 가장 높고 (83.1%), “6.25 70주년 행사에서 북한 애국가가 연주됐다”(79.5%),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75.0) 순임.
- “대북전단 금지법에 따라 북·중 국경 통해 한국드라마 USB 보내도 처벌된다”를 믿지 않는, 곧, 옳게 식별한 응답자 비율이 유일하게 과반(43.9%)이 되지 않음. 이를 적극적으로 사실(9.1%) 또는 대체로 사실(21.7%)로 믿는 적극적 응답층의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남.
- “북, 우라늄 폐기물 방류 탓에 영종도 방사능 수치 급증”(61.4%)과 “적자 국채발행해서 북한을 지원하려 했다”(62.1%)에 대한 가짜뉴스 식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남.

2. 주요 집단별 가짜뉴스 식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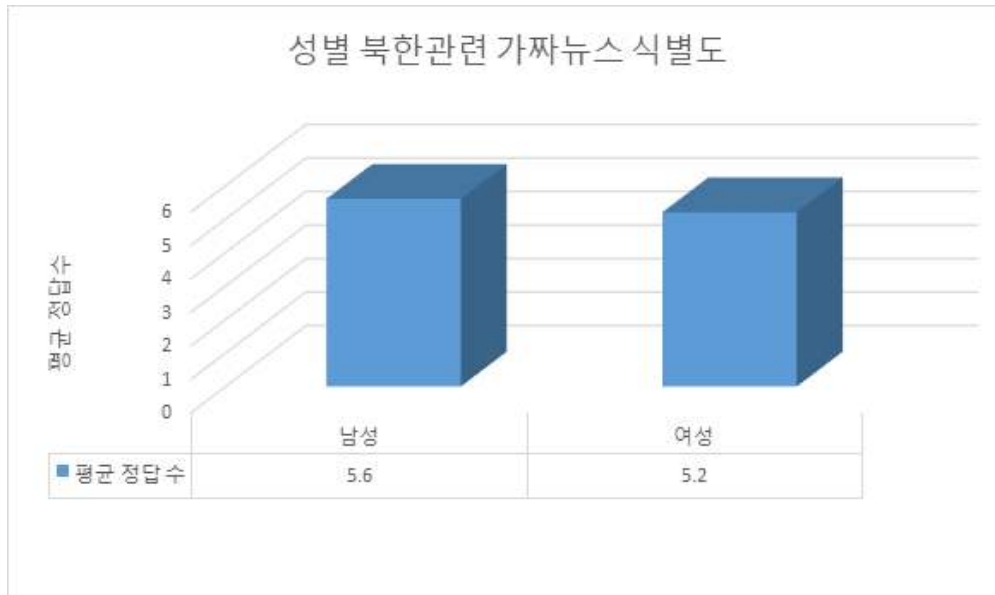
- 8개 개별 가짜뉴스에 대해 옳게 식별한(“믿지 않음”) 개수를 가짜뉴스 식별도로 정의함. 가짜뉴스 식별도는 최소 0점(8개 모두 가짜뉴스 식별에 실패한 경우)부터 최대 8점(8개 모두 식별에 성공한 경우)으로 측정함.

<그림 37> 연령대별 북한관련 가짜뉴스 식별도



- 30대 이하가 40대 이상보다 가짜뉴스에 취약한 것으로 보임.
- 18-29세 응답자의 평균이 가장 낮고(4.7), 40대와 50대의 식별도가 가장 높음(5.8).

<그림 38> 성별 북한관련 가짜뉴스 식별도



- 평균 정답수로 보건대, 여성(5.2)이 남성(5.6)보다 약간 더 가짜뉴스에 취약한 것으로 보임.

<그림 39> 교육수준별 북한관련 가짜뉴스 식별도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짜뉴스를 평균적으로 덜 믿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보임.

<그림 40> 가구 월평균소득별 북한관련 가짜뉴스 식별도



-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이 가짜뉴스에 가장 덜 취약한 것(5.7)으로 나타남.
-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401-500만 원 소득층이 가짜뉴스를 평균적으로 더 믿는 것으로 드러남(5.0).

<그림 41> 주관적 소득수준별 북한관련 가짜뉴스 식별도



- 주관적 소득수준이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답한 응답자의 가짜뉴스 식별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것(7.0)으로 드러남. “평균과 비슷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식별도가 가장 낮은 편(5.2)이나, 이를 제외한 다른 집단의 차이는 크지 않음.

<그림 42> 영호남 거주지별 북한관련 가짜뉴스 식별도



- 전통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해온 호남지역 응답자의 가짜뉴스 식별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난 반면(6.9),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 유권자가 많이 분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의 식별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남(4.7).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평균 정답 수가 과반을 넘어, 거주지역별 차이를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그림 43> 정치이념별 북한관련 가짜뉴스 식별도



- 자신을 진보로 평가하고 있는 응답자가 가짜뉴스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6.0). 중도와 보수의 식별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5.2).
 - 한국의 정치이념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구분과 함께 여전히 대북 정책 차원에 의해 나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44> 정당지지별 북한관련 가짜뉴스 식별도



- 햇볕정책 계승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식별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6.3), 보수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평균 정답수가 4.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민주당 지지자의 식별도는 앞선 결과에서 자신의 정치이념을 진보로 평가한 응답자의 식별도(6.0)보다 높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식별도는 자신의 정치이념을 보수로 평가한 응답자의 식별도(5.2)보다 낮음.
 - 지지정당이 없는 응답자의 식별도(5.1)는 중도나 보수에 가까운 식별도를 보임.

V. 공정성 인식과 통일·대북 정책태도 및 주변국 인식

1. 공정성 인식유형 분류: 임금(연봉) 차이에 관한 두 문항

<표 10> 공정성 인식유형 분류

		동일 수준/동일 연봉	
		동의	비동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봉 차이	동의	능력주의형	차별 수용형
	비동의	보편 평등형	비일관형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봉 차이는 개인의 능력 차이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같은 시간에 같은 수준의 일을 한다면, 동일한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다소 동의함; 4=매우 동의함.
 - 각 문항에 대한 긍정응답(다소 동의함, 매우 동의함)을 ‘동의’, 부정응답(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비동의’로 코딩하여 표에 표기하였음.
 - 우리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임금(연봉) 차이에 관한 인식에 기반해 공정성 인식 유형을 구별함.
 - 차별 수용형: 현실에서 연봉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차별을 수용하는 유형
 - 능력주의형(meritocratic): 노력 및 능력에 비례하는 연봉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 보편 평등형: 기본적으로 연봉에서의 차이에 부정적인 유형
 - 비일관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봉 차이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동일 수준의 일을 하더라도 연봉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유형
 - 선행연구: 구본상(2020)
 - ‘능력주의형’이 북한이 통일의 이익과 혜택을 누릴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 이 유형이 가장 부정적임을 확인
 -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 분석은 ‘보편적 평등형’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더 긍정적이라는 것 확인
 - 그러나 설문조사가 온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응답자의 50%가 당시 20대에 집중되었으며, 종속변수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단순한 선호 수준의 응답을 사용하였다는 한계를 보임.
 - 이에 반해 KINU 통일인식조사는 대면 면접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통일 및 대북정책에 관한 다양하고 정제된 문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공정성 인

식 간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함.

○ 공정성 인식 유형별 비율(KINU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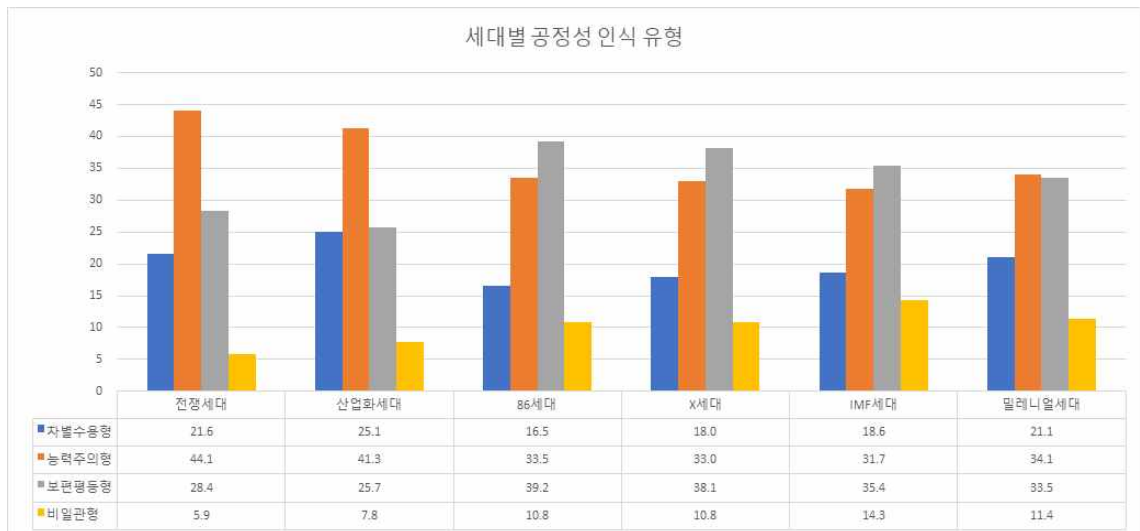
<표 11> 공정성 인식유형별 비율

		동일 수준/동일 연봉	
		동의	비동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봉 차이	동의	능력주의형 35.6%	차별 수용형 19.9%
	비동의	보편 평등형 34.0%	비일관형 10.5%

- 공정성 인식 유형별 비율은 능력주의 > 보편평등 > 차별 수용 > 비일관 순으로 나타남.

○ 세대별 공정성 인식 유형

<그림 45> 세대별 공정성 인식유형



- 그림에서 나타나듯, 60대 이상인 전쟁세대와 산업화세대에서 차별 수용형과 능력주의형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보편 평등형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임. 즉 이들은 임금에서의 차별에 익숙한 세대라고 볼 수 있음.
- 86세대, X세대, IMF세대에서는 보편 평등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특히, 86세대에서 차별 수용형 비율은 가장 낮고, 보편 평등형은 가장 높은 특성을 보임. 즉 86세대가 임금 차별에 가장 부정적이고 평등 지향적인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밀레니얼세대는 차별 수용형과 능력주의형 비율이 IMF세대~86세대보다 높게 나타남.

2. 공정과 통일인식: 평화공존 지향 vs. 통일 지향

<표 12> 공정성 인식유형과 통일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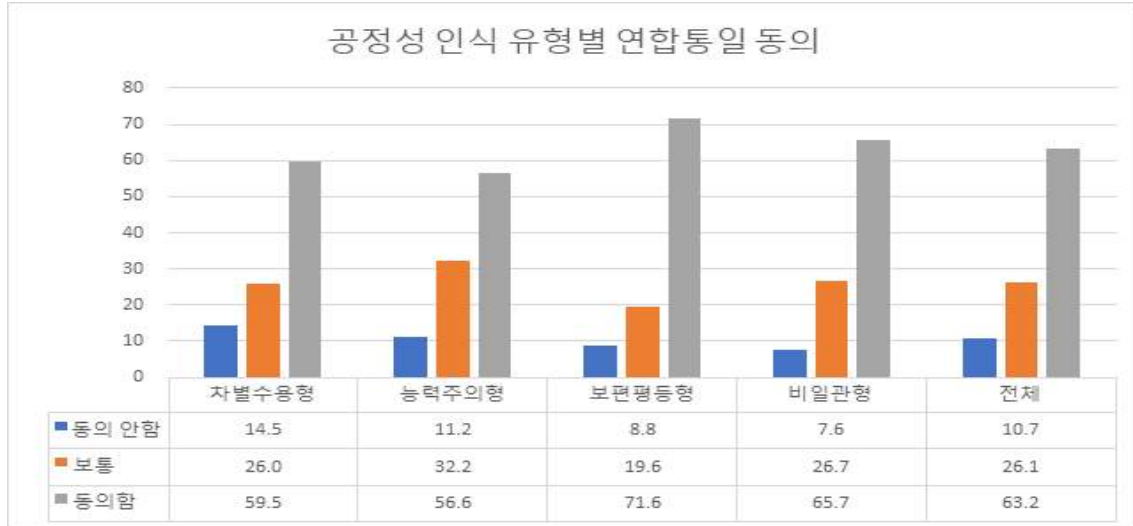
	공정성 인식 유형				전체
	차별수용형	능력주의형	보편 평등형	비일관형	
통일 비지향	143 (71.5%)	287 (80.4%)	137 (69.5%)	81 (77.1%)	748 (74.6%)
통일 지향	57 (28.5%)	70 (19.6%)	104 (30.5%)	24 (22.9%)	255 (25.4%)
합계	200 (100%)	357 (100%)	341 (100%)	105 (100%)	1003 (100%)

□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문항의 부정응답(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통일 지향’으로 나머지(보통, 다소 동의함, 매우 동의함)를 ‘통일 비지향’으로 코딩하여 표에 표기하였음.
 - 전체적으로 통일 지향 응답자 비율은 1/4에 그침.
 - 공정성 인식 유형 가운데 능력주의형이 가장 통일 지향적이지 않았고, 보편 평등형과는 대비됨. 다만 위의 결과만으로 능력주의형이 통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3. 공정과 통일인식: 연합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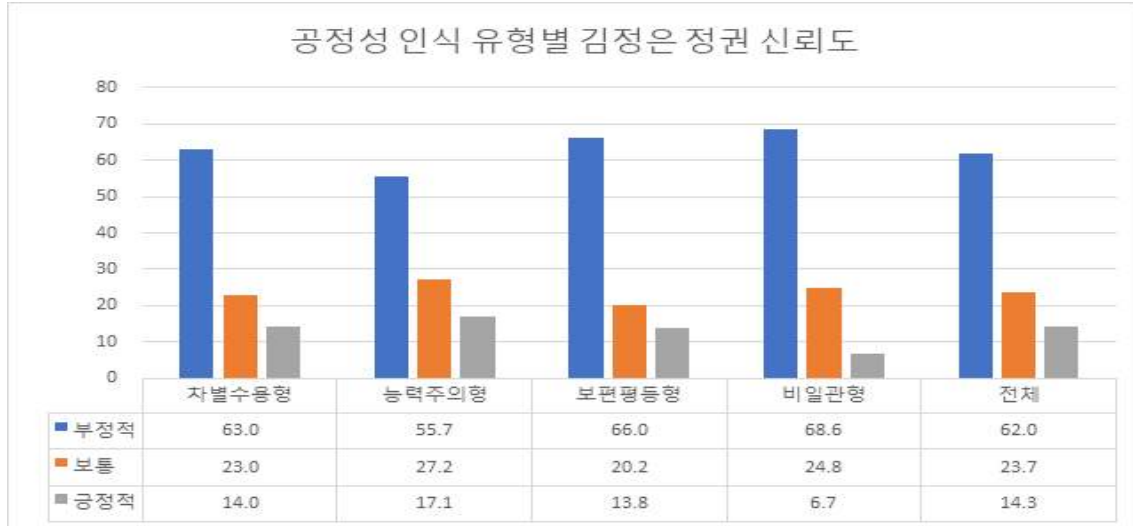
<그림 46> 공정성 인식유형별 연합통일 동의



-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그것도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문항의 부정응답(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동의 안함’, 긍정응답(다소 동의함, 매우 동의함)을 ‘동의함’으로 코딩하여 그림에 표기하였음.
- 전체적으로 다수(63.2%)가 연합통일 개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합통일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보편 평등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즉 보편 평등형이 가장 완화된 통일 개념을 가지고 있음. 반면, 연합통일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능력주의 유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두 유형 간 동의 비율에서 15.0%p 차이가 남.

4. 공정과 북한인식: 김정은 신뢰도

<그림 47> 공정성 인식유형별 김정은 정권 신뢰도



□ “귀하는 현재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다소 그렇다; 5=매우 그렇다.
- 문항의 부정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을 ‘부정적’, 긍정응답(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을 ‘긍정적’으로 코딩하여 그림에 표기하였음.
 - 전체적으로 다수(62.0%)가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에 부정적임.
 - 다른 공정성 인식 유형과 비교할 때 능력주의형이 현재 김정은 정권 신뢰도에 가장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비일관형을 제외하면 보편 평등형이 가장 부정적인 성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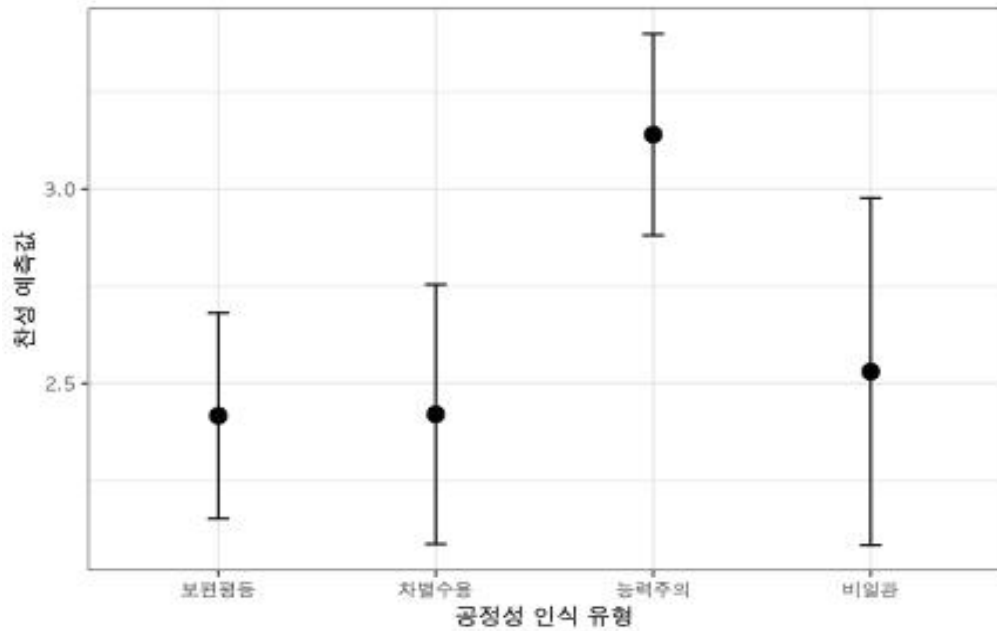
5. 공정과 대북정책: 무력충돌 불사

<그림 48> 공정성 인식유형별 북한과 무력충돌 불사



- “필요하다면 약간의 인명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한과 무력충돌을 해야 한다.”
- 0=매우 반대한다; 5=보통; 10=매우 찬성한다.
- 문항의 부정응답(0~4)을 ‘반대’, 긍정응답(6~10)을 ‘찬성’으로 코딩하여 그림에 표기하였음.
 - 전체적으로 절대 다수(77.0%)가 인명살상을 감수한 북한과의 무력 충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 이에 찬성하는 강경층은 12.7%에 그침.
 - 다만, 다른 공정성 인식 유형과 비교할 때 능력주의형이 무력 충돌에 반대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남.

<그림 49> 공정성 인식유형별 무력충돌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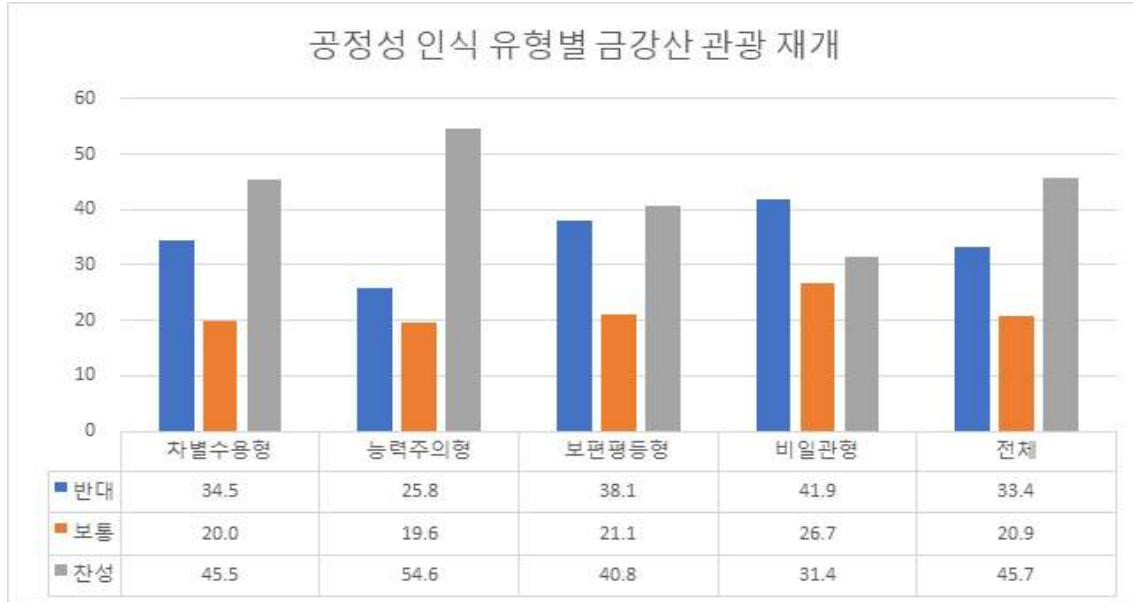


□ 회귀모형 분석 결과

- 무력충돌 불사에 대한 의견은 연령, 지역, 이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 이념, 대통령 국정운영평가(presidential approval rating) 등을 통제한 회귀모형을 수행한 후 한계효과 확인함.
 - 능력주의형은 보편 평등형이나 차별 수용형에 비해 무력충돌도 불사하려는 태도를 보임. 노력이나 책임의 비례성을 강조하는 능력주의형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을 할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북한이 져야한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경향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음.

6. 공정과 대북정책: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림 50> 공정성 인식유형별 금강산 관광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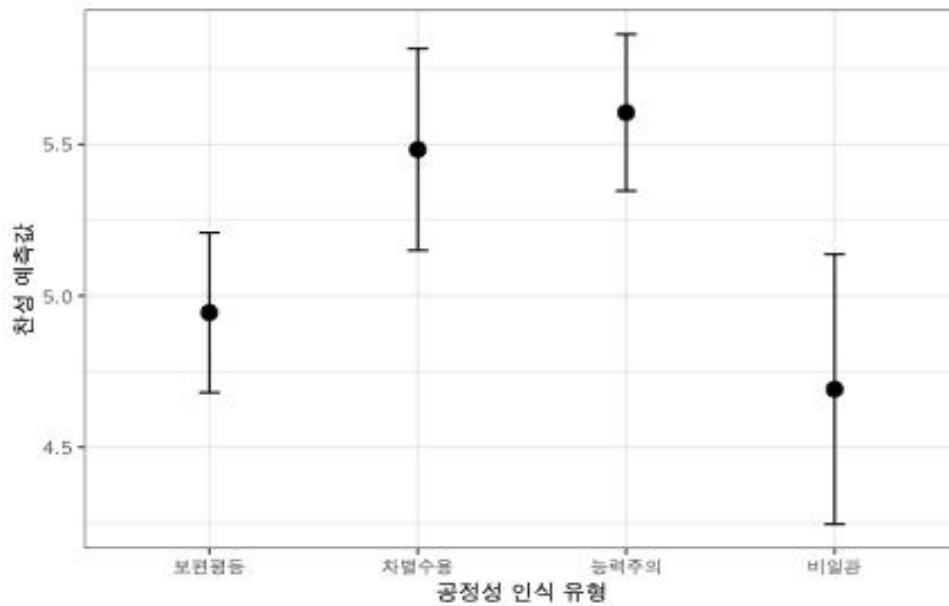
□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 0=매우 반대한다; 5=보통; 10=매우 찬성한다.

○ 문항의 부정응답(0~4)을 ‘반대’, 긍정응답(6~10)을 ‘찬성’으로 코딩하여 그림에 표기하였음.

- 전체적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찬성 의견(45.7%)이 반대 의견(33.4%)보다 높게 나타남.
- 능력주의형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보다 뚜렷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54.6%). 사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경우, 금강산 관광으로 발생하는 부담의 일차적 책임은 관광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비례성을 강조하는 능력주의형은 굳이 관광 재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상대적으로 보편 평등형은 이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그림 51> 공정성 인식유형별 금강산 관광재개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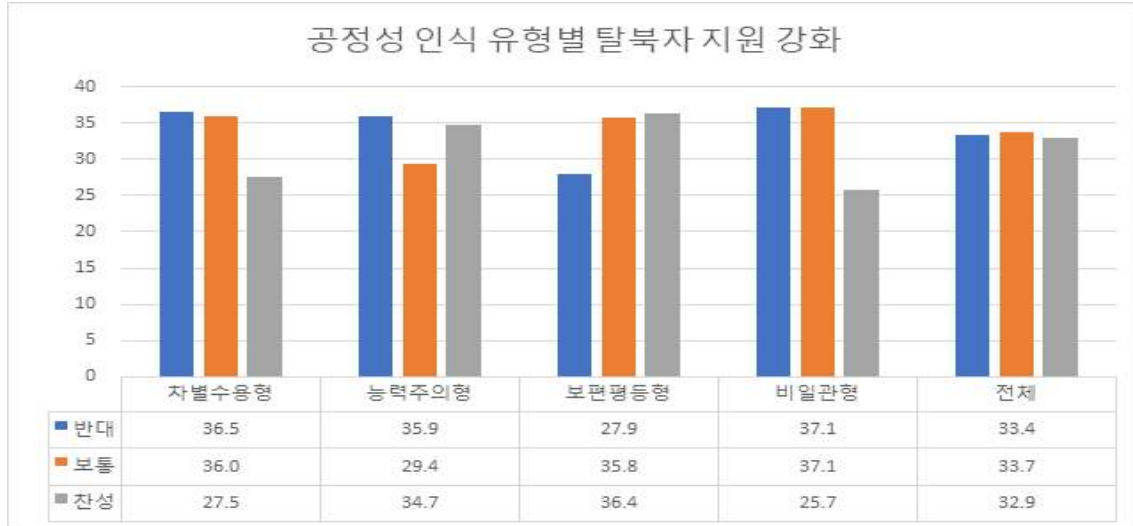


□ 회귀모형 분석 결과

-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은 연령, 지역, 이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 이념,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등을 통제된 회귀모형을 수행한 후 한계효과 확인함.
- 회귀모형을 결과는 정책태도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통제된 상황에서도 능력주의형이 보편 평등형에 비해 뚜렷하게 금강산 관광 재개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음을 보여줌.

7. 공정과 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그림 52> 공정성 인식유형별 탈북자 지원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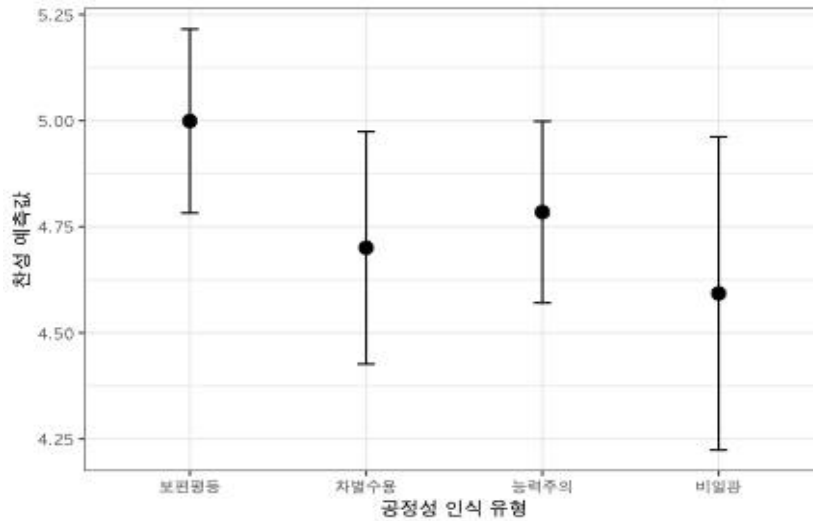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0=매우 반대한다; 5=보통; 10=매우 찬성한다.

○ 문항의 부정응답(0~4)을 ‘반대’, 긍정응답(6~10)을 ‘찬성’으로 코딩하여 그림에 표기하였음.

- 전체적으로 찬성(32.9%)과 반대(33.4%)가 팽팽하게 나뉨.
- 금강산 관광과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원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세금 등 부담을 져야 함. 이에 대해 차별 수용형과 비교해 보편 평등형은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그림 53> 공정성 인식유형별 탈북자 지원강화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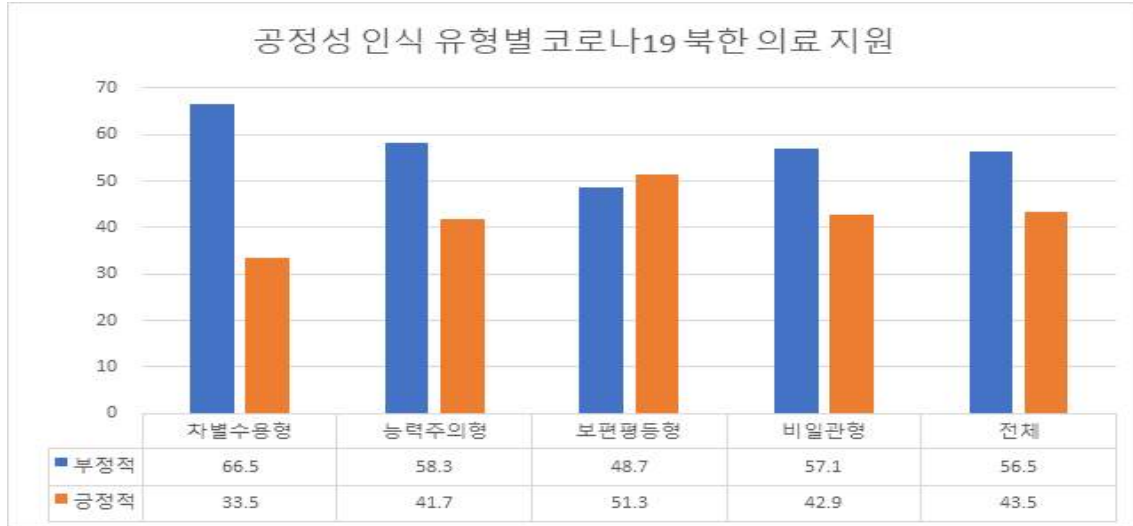


□ 회귀모형 분석 결과

- 정책에 대한 의견은 연령, 지역, 이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 이념,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등을 통제한 회귀모형을 수행한 후 한계효과 확인함.
 - 성별, 연령, 지역, 이념 등을 통제한 회귀모형을 수행한 결과를 보면, 공정성 인식 유형별 한계효과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사라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와 같이 수혜 대상과 책임 소재가 다른 정책에 대한 태도는 공정성 인식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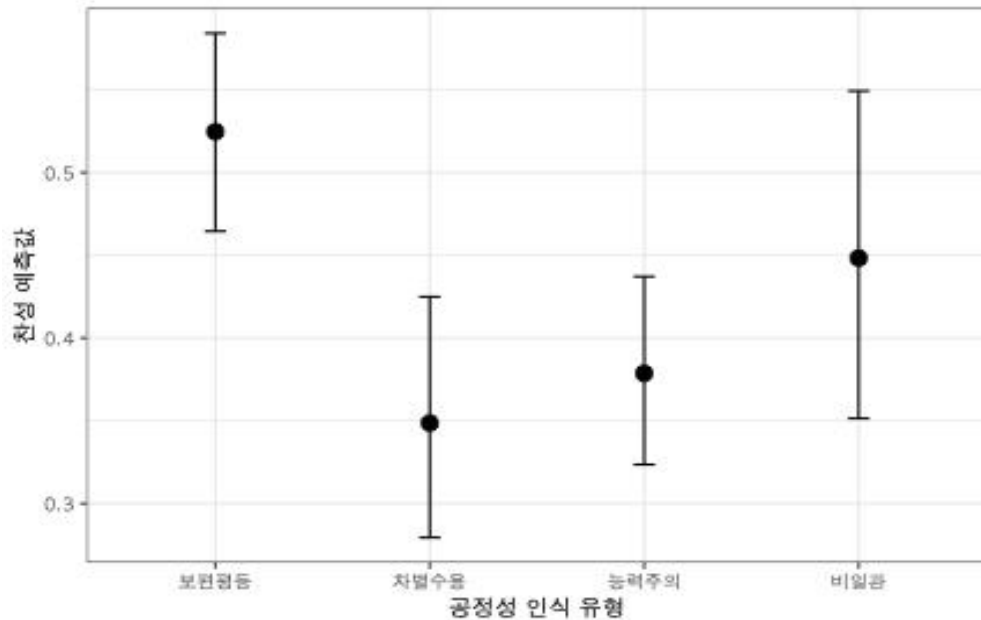
8. 공정과 대북정책: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의료용품 지원

<그림 54> 공정성 인식 유형별 코로나19 북한의료 지원



- “북한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코로나19 관련하여 의료용품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북한의 요청이 없더라도 한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북한이 먼저 요청을 한다면 지원해야 한다; 3=북한이 먼저 요청하더라도, 비핵화나 경제협력 등의 약속을 받은 다음 지원해야 한다; 4=북한이 요청하더라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 문항의 1~2 답변을 ‘긍정적’, 3~4 답변을 ‘부정적’으로 코딩하여 그림에 표기하였음.
- 전체적으로는 의료용품 지원에 강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아예 반대하는 부정적인 태도가 다수(56.5%)로 나타남.
 - 차별수용형에서 뚜렷하게 부정적 태도(66.5%)가 높게 나타난 반면, 보편 평등형에서는 긍정적 태도(51.3%)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남. 이를 통해 차별을 전반적으로 수용할수록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지원에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55> 공정성 인식유형별 코로나19 북한의료 지원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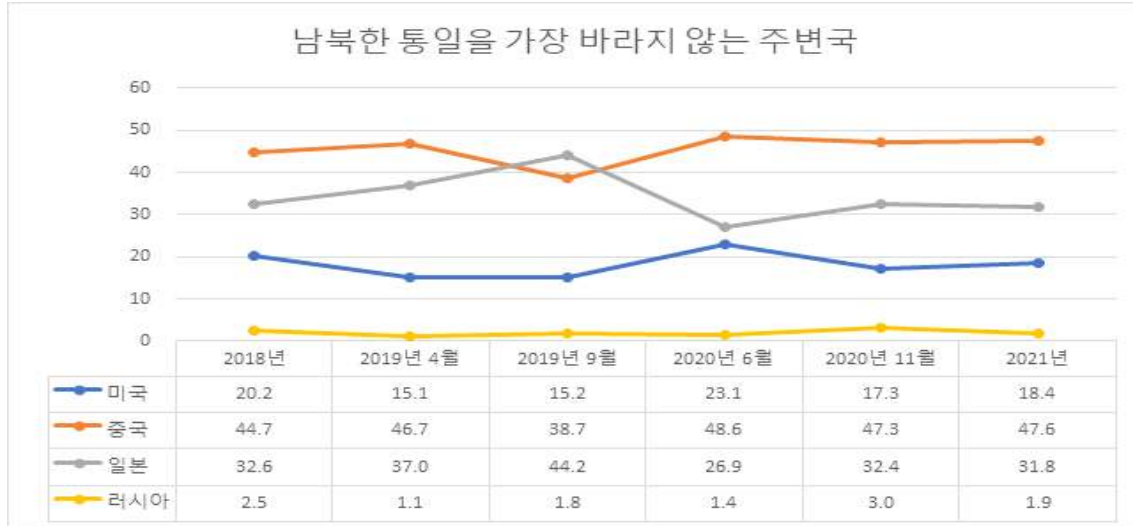


□ 회귀모형 분석 결과

-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을 통제하기 위해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 이념,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등을 통제한 회귀모형을 수행한 후 한계효과 확인함.
 - 성별, 연령, 지역, 이념 등을 통제한 회귀모형을 수행한 결과를 보면, 보편 평등형은 차별수용형과 능력주의형보다 코로나19 관련 북한 의료용품 지원에 뚜렷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 확인됨. 이는 이들이 차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과 연계된 것으로 보임.

9. 공정과 주변국 인식: 남북한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국가

<그림 56> 남북한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주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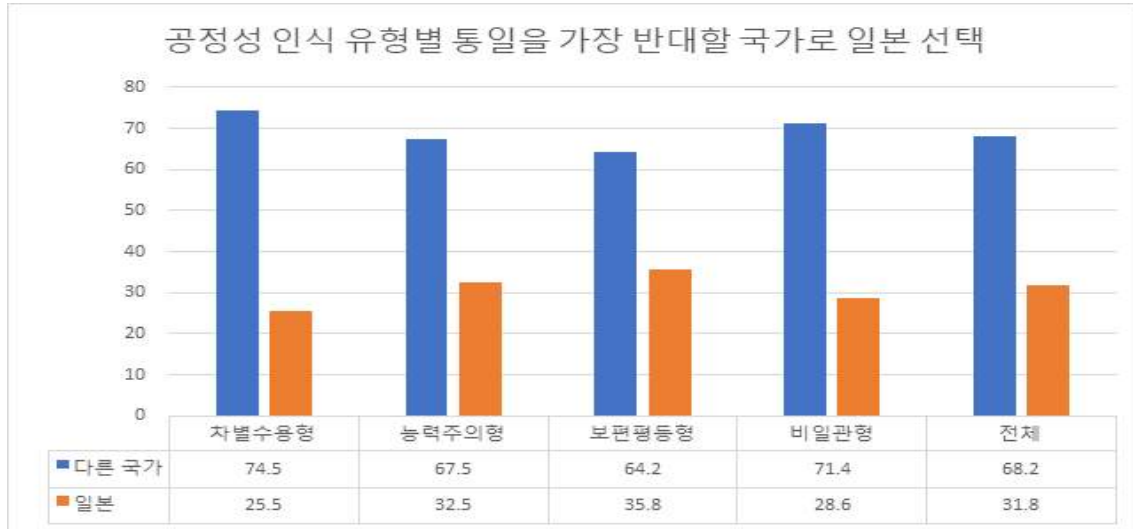


□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국가가 남북한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1=미국; 2=중국; 3=일본; 4=러시아

- 이 문항이 조사에 포함된 2018년 이후 전체적인 응답 비율은 중국 > 일본 > 미국 > 러시아 순임.
- 다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결 고려 및 민간 차원의 강력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된 2019년 2차 조사에서 일본(44.2%)이 중국(38.7%)을 제침.
- 그러나 2020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코로나19 확산 대응에서 일본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자 남북한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국가로 일본을 선택한 비율은 크게 감소함(44.2% → 26.9%).
- 2020년 6월 조사에서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도 크게 낮아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일본이 무기력하다고 느낄수록 일본이 남북한 통일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57> 공정성 인식유형별 통일을 가장 반대할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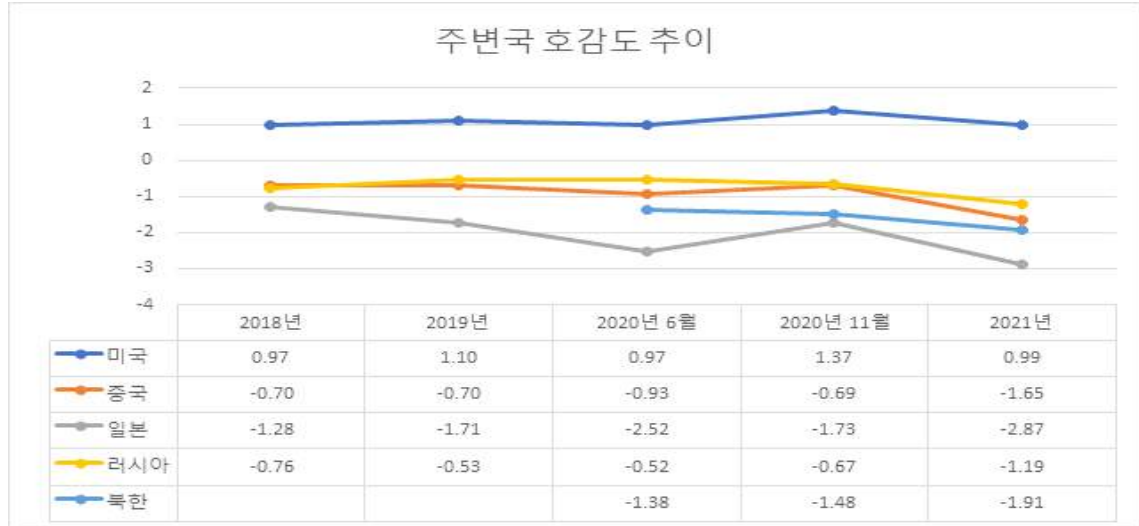


○ 공정성 인식 유형별 일본 선택 비율

- 전체적으로는 31.8%이지만, 공정성 인식 유형별로 차이를 보임.
- 연봉에서의 차이를 쉽게 수용하는 차별수용형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보편 평등형 보다 남북한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국가로서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연령, 지역, 이념,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등을 통제한 회귀 모형 결과에서도 확인됨.

10. 주변국 인식: 주변국 호감도

<그림 58> 주변국 호감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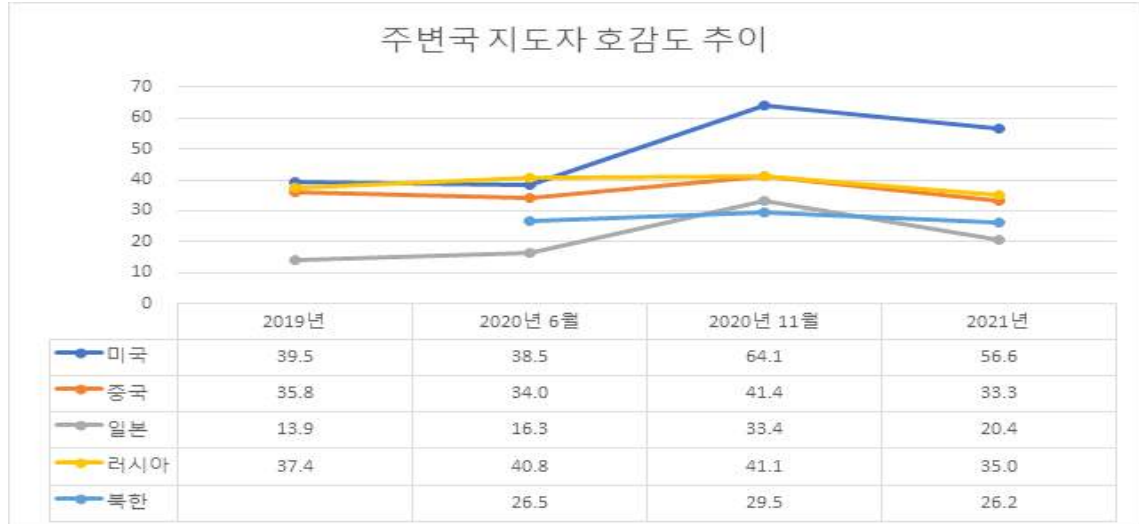
□ “귀하께서는 (해당 국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혹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5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5점은 매우 싫어하는 것을, 5점은 매우 많이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문항은 2018년 조사 이후 포함됨.

- 응답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볼 때 주변국 가운데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뚜렷하게 높음. 유일하게 계속 양의 값을 가짐.
-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음의 값을 가지며, 특히 일본은 뚜렷하게 낮은 호감도를 보임.
- 2020년 11월 조사에서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동반 상승하였음. 이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일본 아베 총리의 퇴진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우리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것일 수 있음.
- 2021년 조사 결과는 모든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가 하락함. 특히,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반일정서가 극에 달했던 2019년보다(-2.52)보다 더 낮게 나타남(-2.87). 이는 스가 총리가 들어서면서 한일관계의 개선 등을 기대했으나 아베 총리 시절과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도 크게 증가함(-0.69 → -1.65). 성별, 연령, 지역, 이념,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등을 통제한 회귀모형 결과를 고려하면, 젊은 층(특히 밀레니얼세대)의 반중 정서도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보임.

11. 주변국 인식: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그림 59>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 “귀하는 다음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0=매우 부정적; 50=보통; 100=매우 호의적

-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2020년 11월 조사에서 호감도가 크게 상승하였음. 비록 2021년 조사에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평균값 기준으로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20점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본 조사가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인들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와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본의 스가 총리의 경우, 아직 아베 전 총리 수준으로 호감도가 낮아지지 않는 반면, 2020년 1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무려 13점 이상 하락함. 이는 주변국 지도자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호감도 감소이며, 교착상태의 한일관계를 반영함.

12. 요약 및 결론

- 본 장은 임금(연봉) 차이에 관한 두 문항으로 공정성 인식에 관한 4가지 유형을 구함. 2021년 현재 한국에는 공정성 인식과 관련해 능력주의(meritocratic)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능력주의형(35.6%) > 보편 평등형(34.0%) > 차별 수용형(19.9%) > 비일관형(10.5%)).
- 공정성 인식 유형 가운데 노력(능력)과 대가의 비례성을 강조하는 능력주의형이 가장 덜 통일지향적인 것이 확인됨. 특히, 보편 평등형과 대비됨. 다만 위의 결과만으로 능력주의형이 통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완화된 연합 통일 개념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보편 평등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그 비율은 능력주의 유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즉 능력주의형이 보편 평등형 보다 통일에 관해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응답자 다수(62.0%)가 김정은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지만, 능력주의형이 현재 김정은 정권 신뢰도에 가장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소수인 비일관형을 제외하면 보편 평등형이 가장 부정적인 성향을 보임.
- 능력주의형은 보편 평등형이나 차별 수용형에 비해 필요시 북한과의 무력충돌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력이나 책임의 비례성을 강조하는 능력주의형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을 할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북한이 져야한다고 보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능력주의형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보다 뚜렷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상대적으로 보편 평등형은 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임. 금강산 관광으로 발생하는 부담의 1차적 책임은 관광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비례성을 강조하는 능력주의형은 굳이 관광 재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원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세금 등 부담을 져야 함. 이에 대해 차별 수용형은 부정적인 반면, 보편적 평등 유형은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북한 지원에 부정적인 태도가 다수지만, 보편 평등형에서는 긍정적 태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는데, 이는 이 유형이 차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공정성 인식 유형 가운데 특히 능력주의형과 보편 평등형 간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정성 인식과 관련한 특정 유형이 통일 및 대북 인식이 긍정적이어서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의 적극적 지지 계층이 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임. 예를 들어, 능력주의형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나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료용품 북한 지원에는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지향적 태도를 보이리라 기대하기도 어려움. 오히려 이 유형은 북한과 필요시 무력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음. 이처럼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공정성 인식과 다층적으로 얽혀있음을 인지하고 접근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함.

- 2018년 조사 이래 러시아를 제외한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는 미국 > 중국 > 일본의 순서가 지속됨. 다만,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 및 주변국 정부 교체 등에 따라 호감도 변동은 감지됨. 2020년 11월 조사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일본 아베 총리의 퇴진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우리 국민의 기대가 반영되어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가 동반 상승했음. 그러나 2021년에는 모든 주변국 호감도가 하락함. 특히,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반일정서가 극에 달했던 2019년보다 더 낮게 나타남. 이는 스가 총리가 들어서면서 한일관계의 개선 등을 기대했으나 아베 총리 시절과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도 크게 증가함. 성별, 연령, 지역, 이념,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등을 통제한 회귀모형 결과에 고려하면, 젊은 층(특히 밀레니얼세대)의 반중 정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크게 상승한 바이든 호감도는 2021년 조사에서는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20점 이상 앞섬. 이 조사가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인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일본의 스가 총리의 경우 아직 아베 전 총리 수준으로 호감도가 낮아지지 않는 반면, 2020년 1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주변국 지도자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호감도 감소이며, 이는 현재 난관에 봉착한 한일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